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여정과 사명

일시 6월 22일(일) 15:00~18:30

장소 주교좌명동대성당 영성센터(구 계성여고) B201호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화나눔연구소

후원:  유니타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기도문>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03
<개회식>	● 축사1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07
	● 축사2 안재홍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08
<기조연설>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적 의미와 소명 정순택 대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09
<제1세션>	● 발표문1 서울대교구 민화위 30년의 교회사적 의미 조한건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10
	● 발표문2 지난 30년 남북 관계의 변화, 희망과 좌절: 교회의 고민과 과제 박태균 (서울대 교수)	26
	● 발표문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 교회의 역할과 과제 변진홍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자문위원)	34
	● 토론문1 김선필 (서강대 신학연구소)	52
	● 토론문2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55
	● 토론문3 서정배 (평화나눔연구소)	57
<제2세션>	● 지정 토론1 김종수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60
	● 지정 토론2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62
<기도문>	● 평화를 구하는 기도	67

축사 1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과 분단 50주년이라는 중첩된 역사의 갈림길에서 출범한 민족화해위원회는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기도와 교육, 북한 교회와의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고자 애써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남북 간의 신뢰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우리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해와 평화를 향한 여정이 얼마나 긴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학술회의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노력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함께 성찰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신뢰를 쌓고 연대를 이루려는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 길은 멀고 더딜 수 있지만, 교회가 그 과정에 함께하며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더 깊은 이해와 화해를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의원 **전재수**

축사 2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 분단 50년을 맞아 갈라진 민족의 아픔 속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자 서울대교구가 한국교회 최초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동안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다방면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명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부설 기관으로 평화나눔연구소를 두어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해 온 것은 시대적 사명을 통찰하고 실천해온 귀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남북 관계는 최악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바닥에 이르면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민족화해위원회의 지난 30년은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걸어온 순례의 길이었으며, 그 여정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화해와 일치, 그리고 형제적 사랑의 정신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족화해위원회의 사명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안재홍 베다

기조연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대주교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의 교회사적 의미

조한건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목차〉

서론

- 1.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족 배경
 - 1.1 민족화해위원회 전신으로서의 ‘북한선교부’ 발족
 - 1.2. ‘북한선교부’의 역할과 ‘북한선교위원회’로의 전환
 - 1.3.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발족
- 2.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들
 - 2.1 ‘민화위’ 통일사목 토대 마련
 - 2.2.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나눔’운동으로의 전환

결론 : ‘민화위’ 활동 30년의 의의

서론

한국천주교회 2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족된 ‘북한선교부’(1982)는 지속적인 북한선교를 위한 기구로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로 발전하였다. ‘북한선교’라는 개념에서 ‘민족화해’라는 인식 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1992년부터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되었고, 서울대교구에서 광복 50주년을 위한 북한선교 기구의 명칭을 “민족화해위원회”로 정하였다. 선교 이전에 용서와 화해가 먼저라는 것이다. 민족화해위원회는 기도와 나눔,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북한교회에 관심을 통해서 민족화해를 지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발족된 배경을 정리해보고, 지난 30여년 간의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족 배경

해방 이후 우리교회는 전후 복구와 교회 공동체 재건을 위해 전념하면서 남북화해에 대해 성찰한 겨를이 많지 않았다. 이는 1920년대부터 세계 가톨릭교회가 취해온 반공주의에 대한 의식과 한국전쟁 전후로 겪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과 1980년대까지 국가가 취해 온 멸공, 반북에 대한 정책과 맞물려온 결과일 것이다. 한국천주교회는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앞두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바티칸으로부터 북한교회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무관심과 교류 단절로 인하여 난처함에 처해졌다.¹⁾ 이제 북한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했다. 민족화해위원회(이하 '민화위'로 약칭함)의 전신(前身)으로 간주되는 '북한선교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장에서는 서울대교구 '민화위'가 발족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초기 활동을 정리해 본다.

1.1 민족화해위원회 전신으로서의 '북한선교부' 발족

한국천주교회는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 쇄신과 민족복음화'라는 두 개의 대전제를 내세우면서²⁾ 그 가운데 한 축인 민족복음화를 위한 '북한선교부'를 발족하게 되었다.³⁾ 당시 기념사업 위원장이었던 김남수 주교는 우리 교회의 200주년 기념사업이 반쪽인 남한 교회만의 기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북한선교'를 특별사업으로 결정하면서 1982년 2월 12일에 '북한선교부'를 신설하였고, 당시 양화진 본당 주임 김몽은(金蒙恩, 요한) 신부를 북한선교부장으로 임명하고 북한선교사업 추진위원 14명도 위촉하였다.

'북한선교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에서 내외국인 선교사를 양성한다. ② 성서, 성물, 대북 방송 프로그램 등 각종 선교물 및 그 전달 기구를 제작한다. ③ 선교사의 직접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북한 출신 인사를 입교시킨 후 선교사업에 헌신하게 하며 제3국을 통해 선교사를 투입하는 문제도 살핀다. ④ 선교 본부로서 북한선교를 위한 본당을 지정하고 북한선교회관 건립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⑤ 외국에 연락 지부를 설치한다. ⑥ 200주년 이후부터 재정 자립을 위한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⑦ 기도와 헌금을 위한 월간지(국내 홍보용)를 발행하며 북한 송부용 유인물 및 간행물을 제작한다. ⑧ 대북한선교 방송국 설립을 추진한다. ⑨ 기도운동을 전개하되 매년 1회 이상 가능 시 매월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한다. ⑩ 전국 차원의 모든 회의나 대회에 북한교회 출신 신자 대표도 참석시킨다.⁴⁾

1) 김남수 주교는 당시의 상황을 『북한선교』 창간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신 교황님께서 북한과 그곳의 교회 사정을 매우 궁금하게 여기시어 물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북한 교회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 교회의 사정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없게 된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흔히 북한 당국의 탓이라고 대답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탓은 전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탓이 더 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을 너무 쉽게 단념해 버렸습니다. 3,40년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의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0주년의 성대한 기념제를 전개하면서, 북한교회를 다시 진지하게 걱정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 이 사업은 200주년이 지나도, 남북통일이 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민족적 사업입니다.” ; 『북한선교』 창간호(서울: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북한선교부, 1984.1.25., 1쪽).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창간호, 1982.12.1., 1쪽.

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 2호, 1983. 1.1., 7쪽.

4) 『회보』, 제 2호, 8쪽.

위의 사업 내용의 초안들은 당시로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난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이루어낼 수는 없었어도 하나 하나씩 풀어가며 실천해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후원과 나눔을 통한 대북지원과 교류가 있어 왔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화해미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것들이다.

북한선교부는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의 해를 앞두고 1983년 6월 25일 명동성당에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회'⁵⁾를 거행하였다. 김남수 주교는 미사 후 북한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며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를 잊지 않았으며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북한교회를 위한 메시지(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성직자 없이,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천주를 찾은 위대한 진리의 민족이며 천주의 백성입니다. 1세기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바치며 살아온 신앙의 겨레이기에 마치 1801년 신유박해 이후 1836년 최초의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기까지 한 세대 동안의 평신도 교회처럼 오늘의 북한교회도 천주 대전에서 다시 한번 순교자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⁶⁾

김남수 주교는 103위 성인식을 준비하면서 북한교회의 상황을 박해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남한교회에서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선교부는 1984년까지 실행에 옮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교회에 제출하였다. 사업 계획서는 크게 북한선교의 의의, 북한선교의 목표(북한의 복음화, 남북의 일치), 북한선교사업의 방향,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지막으로 조직 및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북한선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북한선교부의 사업 내용을 연구, 홍보, 교육, 선교, 기획 등의 분야로 나누었으며 연구의 경우에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바티칸, 해외 가톨릭 기구, 제3국 자료 등 북한의 종교 실태와 북한선교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해외에서 수집하기로 하였다. 자료 수집 이외에도 자료의 분석과 보존, 이를 위한 '북한선교연구소'의 설치 등을 계획하여 지속적인 학술모임이 전개되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이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자료실을 설치하는 등 자료의 분석과 보존을 통해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교육의 경우에는 북한선교 활동을 위한 선교사, 신자 및 북한선교 관계자들 양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 계획서는 북한선교 초기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초기 사업의 방향과 목적, 조직 구성 등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⁷⁾

5) 본래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은 1965년 2월 주교회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6월 25일 다음 주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교회 전체가 바치고 있었다. 이것이 1992년 3월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북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기도문 제목이 변경되었다. 이동호 아빠스는 이 기도문의 제목이 변경되는데 27년이 걸렸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수난과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침묵의 교회'를 강조하기 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동호, 「민족의 화해와 일치」, 『사목』 제 161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년 6월, 2-3쪽.

6) 「회보」, 제 9호(1983.7), 17-18쪽.

7) 「회보」, 제13호(1983.11), 15-20쪽.

1.2. '북한선교부'의 역할과 '북한선교위원회'로의 전환

북한선교부는 1984년 1월에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북한선교부 위원을 23명으로 확대 조정하면서 메리놀회의 합제도 신부를 해외 담당위원으로 임명하고 북한 접촉이 가능한 고종옥(高宗玉, 마태오) 신부, 박창득(朴昌得, 아우구스티노) 신부를 해외 활동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북한선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 활성화의 일환이었다.

1984년 2월 22일에 가진 북한선교부 제7차 회의에서 회보 성격의 잡지 『북한선교』를 격월간으로 간행하기로 하고 1월 25일에 창간호 1만 부를 발행하였으며, 북한선교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선교, 교육, 홍보, 기획 등 5개 분과를 신설하였다.

「북한선교」 창간호에서 김남수 주교는 교황님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자신이 북한교회 사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음을 한탄하며, “200주년의 성대한 기념제를 전개하면서, 북한교회를 다시 진지하게 걱정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성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북한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⁸⁾

한국천주교회는 교황님 방한을 앞두고 1984년 4월 29일을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의 날로 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단식재를 지키며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한국천주교 2백주년기념주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는 ‘한반도 평화(平和) 위한 기도의 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기도의 날은 “39년 동안의 남북분단이 결코 민족의 정신적 분단을 의미해서는 안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⁹⁾ 북한선교부는 20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 교회 대표를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실행될 수가 없었다.

북한선교부는 200주년 기념 대회 이후 주교회의 직속 기구로 개편되었고, 담당 주교로 이동호 아바스가 임명되었다. 1985년 추계주교회의에서 ‘북한선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북한선교부’는 그 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주년 사업을 위한 임시기구로 출발하였기에 주교회의 의에서 승인이 나지 않다가, ‘북한선교위원회’로 승격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준받게 되었다.¹⁰⁾ 그 규약내용을 통해서 이 기구의 본래적 목적과 성격을 알 수 있다. 6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선교부 규약은 3조에서 “이 모임은 북한과 공산권의 겨레에게 가톨릭 신앙을 복돋우며 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¹¹⁾ 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 곧 그 선교의 대상이 북한의 우리 동포와 중국 내의 조선족 동포임을 알 수 있다. 4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북한과 공산권의 겨레를 위한 선교활동, 선교를 위한 기도운동, 이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¹²⁾ 곧 선교를 위한 기도(식별), 연구(관찰), 활동(실천)을 지향하고 있었다.

‘북한선교위원회’는 1988년 산하기구로 ‘한국천주교 통일사목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소장에 김성태 신부를 임명하였다. 통일사목연구소는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8) 각주 1)과 같은 곳.

9) 「가톨릭신문」 제 1403호(1984.4.29.), 3면

10) 한경호, 『한국천주교회의 대북인식과 활동연구』 한국천주교 산하공식기구의 규약과 회칙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5쪽.

11) 한경호,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한경호는 여기서 ‘공산권의 겨레’를 1차적으로 중국 내의 조선족 동포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참조 : 같은 논문, 15-16쪽.

제안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5회에 걸친 세미나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 세미나(1988~1991년)

	대주제	주제	발표자
제1회 (1988. 5. 21)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	민족통일에 관한 사목적 연구의 과제	양한모 소장 (그리스찬사상연구소)
		분단체제의 성립과 한국천주교회	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제2회 (1988. 10. 29)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통일사목 관점에서 본 민족통일의 의미와 통일관	김춘호 신부 (서강대학교)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김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제3회 (1990. 11. 23)	통일 사목이란 무엇인가	통일사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춘호 신부 (서강대학교)
		통일사목의 실천적 과제	류강하 신부 (안동교구)
제4회 1991.	통일사목과 북한교회	기조강연 한국천주교회의 통일사목과 교황청	두봉 주교 (전 안동교구장)
		분단 속의 교회 - 화해와 일치의 지평을 향하여	김성태 신부 (통일사목연구소장)
		북한의 주체사상과 종교정책의 변화 전망	변진홍 (북한선교위원회 기획실장)
제5회 (1991. 12. 4)	남북한 종교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기조강연 남북한 종교교류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종교인의 입장에서 본 남북교류 협력 시대	송월주 (대한불교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위원장)
		북한 사회 변화와 종교활동	강문규 (대한YWCA연맹 사무총장)
		남북한의 종교교류 협력방안 모색	장익 신부 (천주교 세종로 본당 주임)

북한선교위원회는 1990년에 정광웅 신부를 3대 총무로 임명하였고, 1992년 주교회의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각 교구별로 통일준비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5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이후 그 명칭을 유지하다가 1999년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개칭하였다.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북한교회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1984년 고종옥 신부가 북한을 방문하고, 1985년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찾아 가 가족을 만나 평양 고려 호텔에서 한국 순교성인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다. 장익 신부도 1987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바티칸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남남 협력(南南協力)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김수환 추기경의 추인을 받아 방북하였다. 이러한 중재를 통해서 북한의 신자가 교황청에 올 수 있었고, 마침

내 1988년 6월 30일 8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¹³⁾ 또한 1988년 10월 9일 조선천주교인협회는 평양시 선교구역 장충 1동에 대지 1,361평, 건평 500평에 250석 규모로 장충 성당을 건립하였다. 서울대교구 사목연구실장 장익 신부는 10월에 교황청 특사로 장충 성당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장익 신부는 당시 로마 유학중이던 정의철(鄭義哲, 다마소) 신부와 함께 10월 30일 저녁 미사와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바티칸에서 구입해 간 성작, 성합 등 성물과 성경, 전례서를 전달하였으며 조선천주교인협회의 임원들을 만났다.¹⁴⁾ 조선천주교인협회에서는 1991년에 『카톨릭 기도서』,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선택과 실천』 등 4권의 책을 간행하였다. 북한에서 발간한 이 책들은 장재철 위원장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법안 스님을 통해 사제단에 전달하였는데, 1995년 4월 2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처음으로 공개하였다.¹⁵⁾

1989년 10월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주교들은 7월 26~27일 양일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민족통일 문제 주교 간담회’를 가졌고, 이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4개 정당의 통일정책의 기본 방침도 남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의 단계를 거치며, 단일 국가로의 통일을 성취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공통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대북한 창구의 단일화와 동시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한국천주교회 주교단 담화문)¹⁶⁾

1.3.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발족

한국교회는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북한선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다. 이미 1992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¹⁷⁾ ‘북한선교’의 개념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00조-203조에 명확히 나와 있다.¹⁸⁾ 곧 “북한선교는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교회의 부흥과 북한 동포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역량을 갖추는 교회의 활동을 말한다.”(200조)라고 정의하면서, 사목자들은 이를 위해 기도운동, 나눔운동, 홍보운동, 마지막으로 연구와 교육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201조). 그러나 ‘북한선교’라는 용어는 북한을 단지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소극적 인상을 풍기는 용어이며, 실제로 1985년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남한의 북한선교부와 후원회 결성에 대해 “종교의 탈을 쓴 반공 광대 놀음”으로 매도하여 비판한 적이 있었다.¹⁹⁾ 그리하여

13) 1987년 10월 이후 본격화된 ‘조선천주교인협회’의 결성은 평양에서 개최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1987. 6. 8~9)에 장익 신부를 포함한 로마 교황청 대표단이 참가한 결과에 힘입었다. 또한 1946년에 설립된 기독교도연맹과 다른 천주교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였다.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 편, 『통일사목연구논총 제1집 가톨릭교회와 민족 복음화 - 통일사목의 진로와 전망』, 日善企劃, 1990, 324~328쪽.
 14) 한국천주교회 소속 신부로 평양 장충 성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한 이는 장익 신부와 정의철 신부였다. 1989년에는 문규현 신부가, 1998년에는 최창무 주교가 오태순·이기현 신부와 함께 미사를 집전하였다.
 15)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기도문은 남한에서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16) 『회보』, 제54호(1989.9), 5-6쪽.
 17) 각주 5) 참조.
 18) 정진석,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494-497쪽.
 19) 변진홍, 『북한 선교의 현황과 전망』, 『사목』 제 161호, 위의 책, 6-7쪽.

서울대교구에서는 광복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해 깊은 고민과 토의를 거치게 되면서 위원회의 명칭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김수환 추기경은 방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²⁰⁾ 이에 최창무 주교는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교구가 긴 안목을 가지고 민족통일을 향한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1차 회의에서 사순절 통일 특강과 사업 조직에 대한 논의를 한 후, 2월 16일 2차 회의에서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자 하면서 이 기구에 적합한 명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 외에 민족통일위원회, 민족연대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등이 거론되었다. ‘민족통일위원회’는 그동안 정치적 구호로 많이 쓰였고, 개념의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개념으로는 오도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민족연대 위원회’는 민족 내부의 연대를 다지기 위한 개념으로, 1980년대 로마나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공유하였다. 이미 주교회의에서 쓰고 있던 ‘북한선교 위원회’는 선교라는 용어가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 국한지어진다는 부정적 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 위원회”는 교회가 민족을 위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선명히 제시해주는 용어로 파악되었다. 논의의 결과, 위원회 명칭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 위원회”로 하되, 교구장의 승인을 거쳐 공식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3월 1일 자로 민족화해위원회(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e of Seoul:약칭 KRC)가 설립되었다.

〈표 2〉 광복 50주년 기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 계획안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 강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순절 특별 강론 : 명동 대성당에서 김대중, 김덕, 김학준, 박종화로부터 민족 통일에 관한 특별 강연을, 교회 내 인사로는 최창무 주교의 특별 강론을 듣기로 계획되어 있다. - 순교자성월 특별 강연 : 사순절 특별 강론의 성과를 검토하여 8월 30일,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등 4회에 걸쳐 민족 통일에 관한 특별 강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9월 23일(토)과 24일(일)에는 서울의 주요 성지에서 민족화해를 위한 순회기도회를 개최한다. 순회기도회에는 북한 형제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도라산 전망대보다는 성지에서 기도회를 함으로써 순교 신심을 미래의 교회와 연결시키도록 한다. - 대림절 특별 강론 : 경우에 따라가서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 강론을 시행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민족 화해 기원 미사의 정례화</p>	<p>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미사를 민족화해 기원 미사로 선언하고 민족화해를 위한 운동을 지속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단식 기도일 선정</p>	<p>민족화해를 위한 단식기도를 시행한다. 민족화해를 위한 참회와 기도의 의미를 살려서 민족화해 미사가 개최되는 화요일에 단식을 권장하여 시행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은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와 참회와 단식 그리고 미사와 헌금으로 화요일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p>

20) 「김 추기경 금년에 방북 희망」, 『가톨릭신문』, 1995. 1. 1, 1면.

<p>민족화해 헌금</p>	<p>민족화해 미사가 개최되는 매주 화요일, 민족화해 헌금을 걸어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헌미헌금운동의 취지에 입각하여 진행하고 교회 내 언론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화요일은 화해의 날”이라는 표어 아래 민족의 화해를 위해 특별한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권장한다.</p>
<p>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공동 기도문 작성</p>	<p>민족화해를 위해 남북한 신자들이 공동으로 바칠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하되, 북한 신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다. 공동 기도문이 작성되기 전에는 기존의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문을 사용하거나, 본 위원회에서 별도의 기도문을 제정하여 바치도록 한다.</p>
<p>민족화해 기원 성지순례 개최</p>	<p>순교자성월 특별 강론을 모두 마친 다음,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서울 시내 성지 4곳을 선정하여 서울대교구의 주교님 네 분이 시차를 두고 미사를 집전하며, 이 미사 참여와 성지 순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p>
<p>성서 운동과의 연계</p>	<p>11월 26일 그리스도왕 축일부터 1주일 동안은 성서 주간이다. 이 성서 주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며, 분단 상황에 대한 참회를 이끄는 특별 성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이 공부는 명동 대성당에서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교재를 미리 작성하여 전국 내지는 서울대교구 내의 본당과 단체에 배부하여 동시에 교육을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p>
<p>민족화해학교의 개설</p>	<p>민족화해를 위한 특별 강론은 민족화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족화해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6주~8주 정도의 민족화해학교를 개설하여 민족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며 새롭게 시작한 조직이었지만, 초기에는 위원회만 조직되어 있는 형국이였다. 따라서 교구 내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민족화해위원회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도 기존의 활동에 더해서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원의가 발표된 1995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족화해위원회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었다. 당시 최창무 주교가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있으면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민족화해위원회의 책임을 맡았고, 한마음 본부장이던 오태순 신부가 민화위 운영위원장으로 겸했기 때문에 협력이 쉬웠다. 초창기에는 사무실도 나란히 위치했다가 점차 민화위 활동이 커지면서 사무 공간을 분리했고, 1998년부터 재정을 점차 분리시키면서 2002년까지 이어지다가 대북관련 사업은 민화위가 전담하는 것으로 되었다.

1997년 4월 3일 통일사목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1998년 12월 6일에 ‘민화위’와 통합되었고, 북한향민 지원사업과 북한사목 희망 사제 모임 등의 사업을 ‘민화위’가 이어받았다. 1998년 12월 ‘민화위’ 조직을 재정비하던 중 강우일 주교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1999년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강우일 주교가 두 개의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주교회의 민화위는 2001년 초 후원회원들의 명단을 각 교구별로 이관시켰고, 서울대교구로는 18,000여 명의 명단이 이관되었다. 총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18,000명이 넘는 후원회원이 2001년 7,800명, 2004년에는 5,219명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서울대교구에서는 부족한 기금을 위해 2000년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차 헌금을 활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각종 모금활동을 했다.

무엇보다 민화위의 출발점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해미사'가 있었다. 1995년 3월 7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첫미사가 봉헌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지속적으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1995년 8월에는 박창득 신부를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문으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사용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민화위는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5년 10월 미국 뉴저지 포트리 힐튼 호텔에서 '민화위'와 조선천주교인협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세미나라는 학술 모임의 형태를 명분으로 만난 이 모임에서 남북의 교회 지도자가 만난 것이다. 1998년에는 마침내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 힘들게 성사된 이 방문은 최초의 사목적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교구 서리를 대리하여 대표단이 방문하고 미사까지 봉헌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민화위'는 장충성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과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한편 1997년 4월에 발족된 서울대교구 통일사목위원회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북한 사목 희망 사제 모임'도 결성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 모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같다. 이천년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민간교류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2002년 북한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으로 남한에 방문하였다. 2003년에는 북한에서 60여명의 여러 종교들이 방문하였고, 이 중 천주교 신자들이 명동성당의 교중미사에 참여하였다.

민화위의 활동은 단순히 기도와 연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창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였고, 처음에는 대한적십자사와 홍콩 카리타스를 통해 북쪽에 필요한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하였다. 1996년부터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을 펼치며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모금에 어려움이 생겼고, 점차 대중적 관심도 줄어들고 말았으며 2000년 말 사업 총결산 보고를 하며 마무리 짓게 되었다. 1995년 10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의 6개 종단이 참여하는 '종교 간 대화 모임' 30주년 행사에서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운동' 발족식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1997년 서울대교구의 '한마음', '민화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북한에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1월에 '겨울나기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의류 550상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1998년 9월부터는 대한적십자사와 해외 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대북지원사업을 조선카톨릭협회를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북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농업용 비닐, 비료, 농기구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물품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더 확장시켜 국수 공장을 지어주게 되는데, 신천, 남포, 평양 옥류 등 세 곳이 지어지고 재료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부족한 재원을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서 지원받기도 했고, 특별헌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북지원사업 이외에 북향민 중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였다.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을 줄여서 '하이모'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북향민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주고, 공동체성을 길러주도록 하였다.

'민화위' 설립과 더불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시한 것 중 하나가 '민족화해학교' 개설이었다. '민화위' 설립 당시 기도, 나눔, 교육과 연구의 세 가지 방향성은 결국 북한교회에 대한 이해와 깊이 연관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민족화해학교'를 개설하였는데, 이 교육 프

로그래프는 기존의 반공주의 일변도의 교육이 아니라, 북한을 바로 알자는 취지였다.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최고 강사진들로 이루어진 이 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500여명이 넘는 수강생으로 시작하여 점차 감소되어 마지막 3단계까지 수료한 이는 52명 정도였다. 주제별 세션은 세계의 변화와 민족의 화해,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의 대비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졌다. 단계별로 심화된 내용을 전하고자 했다.²¹⁾

그 외 민화위 초창기 사업 중에 2000년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분단사에 대한 교회적 반성과 의식 전환」이라는 주제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주관한 학술행사가 있었다.²²⁾

민족화해위원회의 설립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북한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선교’에서 ‘민족화해’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북한동포가 단순히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자유인으로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동등한 신자로서 평화의 나눔을 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깊이 새겨진 남북의 상처를 용서와 화해로 치유하자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다.

2.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들

‘민화위’는 그 시작에 기도, 나눔, 연구와 교육 세 가지 지향을 갖고 출발했는데, 무엇보다 민족화해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다만 실천을 위해 기도로 우리 내면을 준비시키고, 상대를 알기 위해 연구와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나눔을 통해 실천으로 화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내면의 준비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면 먼저 만나 나눔을 가지면서 그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제 민화위의 민족화해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과 활동을 검토할 차례이다. 여기서는 ‘민화위’의 다양한 활동들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1 ‘민화위’ 통일사목 토대 마련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04년 9월 ‘비영리법인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기존 규약을 폐지하고, 새 정관을 제정하여 서울대교구장의 승인을 얻었다. 민화위는 사회사목부 소속으로 상임위원회와 감사 및 사무국, 여러 분과로 조직 체제를 정비하였다.²³⁾ 민화위는 미래의 통일사목을 대비하기 위해 인적, 물적 토대 마련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에 독립적인 공간인 ‘민족화해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족화해학교를 재개하고자 했다.

21) 제1 단계 1기 교육 강의안을 모아서 1996년 7월에 『민족의 화해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두 번째 권은 제2 단계 1기 교육 강의안을 모아서 1999년 3월에 『민족의 일치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2) 2000년 6월 10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이다. 기조 강연은 최창무 대주교(광주대교구장)가 하였으며 제1 발제는 강인철 교수(한신대 종교사회학과)가 「분단과 한국교회: 반성적 고찰」로, 제2 발제는 정광웅 신부가 「대북지원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23) 기획홍보분과, 교육연구분과, 교류협력분과, 복지활동분과로 나누었다.

민화위는 설립 10주년을 앞둔 2004년에 참회와 속죄 성당 건립을 본격화하였다. 2006년 성당 착공식과 '상량판'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예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2013년 6월 25일 성당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이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가 맺은 '공동 사목 합의서'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자로 의정부교구로 이관되었고, 2014년에 완공된 민족화해센터도 같은 순서를 밟았다. 따라서 민화위의 센터건립을 위한 노력은 새롭게 추진하거나 초교구적 협업을 통해서 이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민화위 설립 때부터 중점을 둔 교육으로 민족화해학교는 2000년까지 운영하면서 1,000여명의 통일사목 역군을 양성하였다. 이후 중단되었던 민족화해학교는 2007년 재개되어 겨레 화해와 일치, 통일 의식 고취, 통일사목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 민족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4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 이 강좌에는 90여명이 수강하고, 35명이 전 강좌를 이수하였다. 또한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 2기 학교를 개설하였다. 초창기에 비해서는 호응도가 떨어졌다.

2005년 3월 1일 설립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분단 60주년을 맞는 이 시점을 민족의 회년으로 받아들이면서 화해의 손길을 뻗치고 마음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고, 김수환 추기경은 “장애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하듯이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를 위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 화해를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매주 화요일마다 봉헌되는 민족화해미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2008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식당에서 목주기도 모임을 계기로 결성된 '로스리오회'는 5년간 모임을 이어오다 2013년 특수사목 공동사제관인 '대건의 집'에서 '민화위' 본부장 정세덕 신부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직원들은 개성공단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염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초기 '민화위'의 대북지원 사업은 '긴급구호'의 성격이 강했지만, 차츰 '생산기반 조성'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수공장을 마련해 준 '민화위'는 2004년 분기별로 밀가루 300톤, 총 1,2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해주었다. 2004년은 룡천 가스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나 '민화위'는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위로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 외에 미숫가루 지원, 경운기 지원사업, 2005년부터 북한 어린이를 위한 효모 영양제 생산공장 건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위해 우리은행 전국지점에 저금통을 비치하여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의료지원을 위해 왕진 가방 500세트를 황해 신천군 인민병원에 전달하였다. 콩기름은 취약계층의 육류 대용 식품이므로, 콩기름 공장건립과 운영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나눔과 지원은 결국 후원금이 있어야 했는데,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 미사 후 통일사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여유치는 않았다.

1999년 결성된 '하이모'는 지속적으로 북한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는데, 여름캠프, 문화행사 등으로 이어나갔다. 2004년 민화위 설립 9주년 세미나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해소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가졌다. 외적인 대북지원의 길이 막히므로 북한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는데, 북한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적응 훈련과 소양을 갖도록 도와주었으며, 북한민 농촌 이주 및 생산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12년 DMZ를 횡단하며 순례하는 '불어라 세계평화의 바람'을 실시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민화위는 'DMZ평화-생태-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여정에는 75명, 국외에서 19명 등 국내외 청소년 94명이 봉

사자 30여 명과 함께하였다. 순례 구간은 파주 통일대교를 출발해 5사단 신병교육대 및 열쇠전망대→철원 노동당사 및 제2땅굴→화천 베트남참전기념관→을지전망대 및 양구 전쟁기념관→영대자연휴양림→강원도 고성 및 건봉사(乾鳳寺)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2.2.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나눔'운동으로의 전환

2014년 서울대교구는 민족화해위원회의 체계를 개편했다. 2013년 7월 서울대교구의 직계 개편안에 따라 사회사목부에 속했던 '민화위'는 특수사목담당 교구장 대리인 최창화 몬시뇰이 담당했는데, 이제 사회사목국 산하가 되었다. 2014년 2월 교구는 내부의 체계도 개편을 하였다. 민화위 본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본부장직을 맡은 정세덕 신부가 위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실제적인 사목의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다.

2014년 이후 민화위는 검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나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후 첫 부활 메시지(Urbi et Orbi-Easter 2013)에서 한반도의 불화가 극복되고 새로운 화해의 정신이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발표하며 한반도의 화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2014년 2월 추기경에 서임된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은 그해 5월 한국 출신 추기경으로서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민족화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부활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한국을 방문하며 재차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대교구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주도한 것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산하 유니타스(Unitas)였다.²⁴⁾ 유니타스는 2014년에 통일부가 공고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에 참가하여 본격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유아 등의 질병 치료, 온실 지원 사업, 영유아 등 영양 개선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유니타스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으로 평안북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밀가루를 전달하였다. 밀가루 지원을 마친 후 서울대교구 민화위는 대북협력팀의 팀장으로 청주교구에서 파견한 김훈일 신부를 임명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농기계, 종자 등 지원이 결정되어, 일부를 지원하였고, 피코미아 수녀를 통해 여성용품에 복측에 전달하였다. 2016년 7월 유니타스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대북지원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민화위는 2015년 8월 16일부터 5박 6일간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중접경 탐방 "2015 평화로 가는 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조중 접경지대인 중국 연길, 훈춘, 도문, 용정, 백두산, 집안, 통화, 단동, 대련 등을 탐방했다. 평화로 가는 길 프로젝트는 조중접경지대를 둘러봄으로써 분단된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요 테마는 '걷다'(북한의 현실을 조망), '바라보다'(광복과 한반도의 미래를 보다), '그리다'(평화의 길을 모색) 총 세 가지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8월 남한 방문이 확정되자, 민화위는 평화나눔을 위해 북측 교회인사들과 접촉하여 전례적인 나눔을 협의했으나 만남으로 그치고 말았다. 경직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남북

24) 유니타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남·북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단체였다.

교류보다는 북향민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청년들에게 주목하여 문화체험과 피정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다. 2016년 5월부터 북향민 캠프인 ‘좋은부모학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DMZ국제 청년 평화순례 ‘평화의 바람’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분쟁 지역의 청년들과 재외 동포 등과 함께 분단 현장을 걸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유니타스 엔젤스 합창단을 설립했다. 매주 화요일 ‘화해미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통일부 가톨릭 신자회인 ‘프란치스코회’도 2014년 7월 24일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창립미사를 봉헌했다. 2015년 1월 6일 1,000차 화해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은 ‘북녘 교회를 위한 영적 신자 운동’을 선포했다. 민화위는 그해 8월 31일 영적 신자 운동의 명칭을 ‘내 마음 북녘 본당 갖기 운동’으로 변경했다. 이 운동은 북녘땅의 57개의 성당을 기억하는 기도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운동’의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대교구 북녘 지역이 621명(평신도 547명, 성직자 6명, 수도자 68명)으로 가장 많고, 평양교구가 491명(평신도 412명, 성직자 9명, 수도자 70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례대로 함흥교구 353명(평신도 337명, 성직자 1명, 수도자 88명), 덕원자치수도원구 158명(평신도 107명, 성직자 0명, 수도자 51명), 춘천교구 북녘 지역이 94명(평신도 78명, 성직자 1명, 수도자 15명)을 포함한 총 2,825명의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5월에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을 봉헌하고 있다. 2017년 3월 18일에는 평양교구 설정 90주년 기념미사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미사에 참석한 이들은 제6대 평양교구장인 홍용호 주교(洪龍浩,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1906~?)의 사목표어 ‘일어나 가자’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양교구의 재건과 통일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²⁵⁾

2015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부설 기관으로 평화나눔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평화나눔 교육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평화나눔연구소는 평화와 나눔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년부터 평화나눔연구소가 실시한 학술행사는 평화연구 콜로키움, 평화나눔포럼, 창립기념세미나,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학술심포지엄 등이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시작된 한반도평화나눔포럼은 평화나눔포럼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되었다. 한 가지 특징은 전 세계의 교회 고위 성직자를 비롯한 석학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²⁶⁾

평화나눔연구소는 2016년 2월에 평신도 북한·통일 문제 연구자 모임인 ‘토마스회’를 발족했다.²⁷⁾ 평화나눔연구소는 교회의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토마스회를 창립했으며 토마스회는 영성, 북한·통일, 평화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매월 1회 연구 모임을 가졌다. 코로

25) 이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야 루카 교구장인 프란요 코마리차(Franjo Komarica) 주교는 평양교구-반야 루카 교구 자매결연서를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했다. 반야루카교구 역시 1992~199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으로 인해 인종청소와 종교 갈등을 겪은 후, 교구 신자 수가 25만 명에서 5000여 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평화를 바탕으로 한 교구 재건이 절실했다. 평양교구와 반야루카교구는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서로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했다

26) 예컨대 2016년에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화해’에 대하여 발표한 중동 및 안티오키아 마로나이트 교회 총대주교인 베사라 부트로스 알 라이(Bechara Boutros Al Ra'i) 추기경, ‘전쟁 이후 사목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발표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대교구장인 빙코풀리치(Vinko Puljić) 추기경, ‘전쟁과 테러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평신도들의 임무’라는 주제의 글을 발표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교구장인 스타니스라브 호체바르(Stanislav Hočevar) 대주교 등이 있다.

27) 토마스회는 동양평화론을 제창한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며, 그의 세례명인 토마스를 단체의 이름으로 선택했다.

나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췄으나, 최근 2024년 8월에 재출범하였다. 평화나눔연구소에서 발행한 연구서와 학술서로는 임순희의 『북한주민의 종교성』, 윤여상·안현민의 『북한 종교 박해 역사와 사건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평화나눔연구총서 I: 가톨릭교회 평화론과 평화 사상』이 있다. 학술지로는 2020년 처음 발간하여 2024년까지 연 2회, 총 9회 펴낸 『인간과 평화』가 있다.

평화나눔연구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민족화해와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인식조사는 천주교인과 일반인, 타 종교인 및 무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²⁸⁾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천주교인에게 기대하는 인식과 실제 천주교인의 대북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리스도교인은 다른 종교인과 무교인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천주교인은 북한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개신교인들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 역시 존재했다. 천주교인에 대한 조사의 결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일, 화해, 협력에 우호적이며, 노령 신자가 통일에 소극적인 것에 반해 40~50 중년층은 보다 적극적이고 청년층이 가장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과 호남 신자가 타지역에 비해 통일에 좀 더 동의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실제 정책에서 서울의 신자가 북한에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로는 고학력층이 통일을 좀 더 합리적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사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8%의 저조한 응답이 나왔지만,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약 82%로, 일반 국민이 43%를 기록한 것보다 39%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 남북관계의 미래 체제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제와 일반 국민, 천주교 신자 사이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사제들이 일반 국민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있지만, 통일 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을 넘어서는 사유를 갖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인식조사와 설문조사는 앞으로 많이 보완해나가면서 진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에 ‘화해평화학교’를 신설했다. 화해평화학교는 한반도의 화해·평화와 일치를 위해 교회가 강조하는 바를 교회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전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진행한 1995년의 <민족화해학교>, 2004년의 <민주시민교육>, 2014년의 <평화나눔학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화해평화학교는 20~39세의 청년과 수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에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서 강의가 이뤄졌다. 각 강의는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총 8개의 강의 외에도 1박 2일 DMZ 특별기행을 기획함으로써 수강생들이 강의뿐만 아니라 답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화해·평화와 일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강의 주제로는 평화신학, 북한정세, 분단문화, 국제정세, 문화교류, 북한교회, 종교교류 등이 다뤄졌다.

‘민화위’의 활동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상황과 현재 정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화위’가 추진하는 사업인 기도와 나눔과 연구 및 교육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 기관의 역량으로

28) 두 개의 조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앞의 조사집단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중에 ‘종교’ 문항에서 천주교라고 응답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따른 이익(국가 및 개인),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용서 여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남북한의 미래 형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루어낼 수 없는 종합적 사업이므로 향후 타 교구와의 협력도 필요해 보인다.

3. ‘민화위’ 활동 30년의 의의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족과 30년간의 활동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제 그 30년간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보고 문제점을 점검하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차례이다.

한국천주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긴 조선정부의 탄압시기인 박해기를 거치며 성장하였다. 한국천주교회의 종교자유 의의 시점을 어느 때부터 보아야 하는지는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²⁹⁾ 우리교회는 개항기를 거쳐 점진적인 종교자유를 얻게 되었고, 일제시기의 정교분리의 원칙시기를 거치면서 천주교를 법적으로 용인받게 되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천주교에 대한 조선인들의 몰이해, 외국문화에 대한 두려움 등 봉건시대의 한계에서 오는 배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천주교 상황을 보면, 종교가 단순히 개화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공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갈등에 의해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양은 개화기 이후 개신교가 가장 활발히 전교된 지역이었고, 가톨릭에서도 미국선교회인 메리놀 외방선교회를 통해서 가톨릭 액션 등의 활발한 사목을 전개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과 충돌하면서, 북에서 활동한 가톨릭 사제와 수도자들은 고난의 길과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서울대교구에서는 “민족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고, 나눔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남과 북의 정부가 교착상태에 있을 때도 ‘민화위’는 계속하여 화해를 위한 미사와 기도를 지속시켰고,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졌다. ‘민족화해학교’를 개설하여 향후 북한 선교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고자 했고,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점차 북한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켰고, 북한민 청소년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무엇보다 그 출발에 있어서 ‘민족화해’를 우선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먼저 성찰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했다. 비록 개성공단의 폐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잦은 도발 등 악재의 상황들이 많았으나 ‘민화위’는 기본적인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30년 동안의 ‘민화위’ 업적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래도 부족했던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화해 미사’ 및 여러 기도모임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주보공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사제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특수분야에 속한 신부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화위’의 성격상 더 많은 사제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필자 역시 ‘화해 미사’를 가 본다고 몇 번을 생각하고자 한 번도 의지를 가지고 참례해 본 경험이 없다.

29) 양인성, 「개화기 천주교 선교 문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저자는 개항기 이후 조선정부와 프랑스가 맺은 조약들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명시적으로 승인된 기록이 없으므로 일제시기 전까지 천주교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필자 역시 동의한다.

연구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콜로키움, 세미나, 포럼 등을 열어서 전문적 연구와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그러나 좀 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사회학적, 통계학적 다양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미 연구되어 있는 과거의 생각과 옛 연구의 검토인 역사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북관계는 실천을 통해서 진전되어 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론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민화위’의 여러 업적 중에 다양한 나눔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후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금을 하면서 대북 지원에 힘을 기울일 수가 있었다. 이것은 박해기 교우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이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그 뿌리에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의 노력이 국가의 정책과 잘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보여진다.³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부적인 행사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다. 향후 더 많은 교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기금을 마련할 일이 필요할 것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 1930-2024)은 T+40이라는 원리를 제시하며, 어떠한 상처에 타격을 받은 세대가 생물학적·사회적으로 은퇴하고 상처에 의해 타격을 입지 않은 새 세대가 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40년 정도로 보았다.³¹⁾ 한국전쟁의 상흔은 이러한 생물학적 원리를 뛰어넘는다. 어느덧 광복 80년에 75년의 전쟁 상흔 회복시기를 지내고 있다. 100여년이 넘는 긴 박해시기를 견디어 왔던 한국교회는 지금 ‘주는 교회’라는 선교시대를 살고 있다. 내가 먼저 가겠다는 선교사들의 용덕에 힘입어 발전해 온 한국교회에 ‘관심의 선교사’가 요청된다. 역사연구가 관심에서 시작되었듯이 민족의 화해는 그 상흔의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상처를 직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치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용서의 힘에 의해서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다. 우리는 이미 남북관계에서 그러한 희망을 여러번 경험하였다.

교세의 감소와 성소자의 부족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화위’ 30년의 시간을 돌아본다면 교회의 내·외적인 시련은 항상 있었고,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나눔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속시켜야 한다.

30) 홍용표, 「남북관계:50년의 경험과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38권 제 1호, 2022(봄) 통권 116호, 193-194쪽; “남북관계에는 민족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둘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정책 지향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소위 ‘국가 중심적 시각’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중시하며,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민족 중심적 시각’은 남북관계에서 민족의 공동이익과 동포애를 중시하며,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정영철, 2018; 최완규, 2015). 대체로(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자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 세력, 후자는 진보적 세력의 대북정책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 국제정치적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국가 중심적 시각은 현실주의, 민족 중심적 시각은 자유주의와 유사한 정책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그 존속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민화위’의 활동이 민족화해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도 국가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일민족국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겨레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화합시키려는 교회의 노력은 국가에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 강주석,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쪽에서 재인용; 강종일, 이재봉 편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 들녘, 2001, 187쪽.

남북관계 30년의 평가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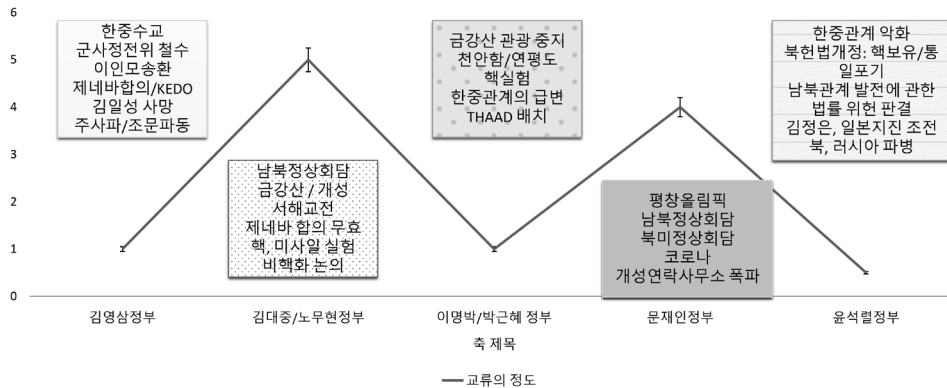
남북관계의 기존 연구

- 국제환경의 변화 (우승지 2008, 전재성 2015), 남한 국내정치의 변화(김형석 2017, 황지환 2017), 대화 갈등의 연속(김연철 2018, 김형기 2010)
- 국가 중심적 시각(보수) 민족 중심적 시각(진보) (최완규 2015, 정영철 2018)
- 자유주의적 (교류협력이 갈등 감소로), 현실주의적(갈등이 정상 상태, 교류협력이 예외 상황), 기능주의적(경제교류가 국제협력과 지역통합으로)
- 구성주의적 (정체성 변화에 따른 관계의 변화) (이근 2001, 전재성 2005, 안문석 2021)
- 어느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없고 복합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제정치학자들의 시각.

남북관계 30년의 특징

- “박근혜 정부의 채찍도 문재인 정부의 당근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효과가 없었다... 남북관계는 제자리를 맴돈 것.”
홍용표, “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 2022
- 1972년 이후 667회 회담, 258건의 합의서 채택. (김기웅 2021) 북한은 제2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현상수정에서 현상유지로.
- 국가적 차원과 민족적 차원이 공존 =>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동시에 작동하는 관계. 진보/보수 정부로서 남북관계를 규정하기에는 협력적/대결적 관계가 공존.

남북관계 30년의 큰 흐름



30년간 남북관계 분석의 새로운 접근

- 1980년대 후반부터 약 40년 간의 연표 정리.
 1. 협력과 갈등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변수 찾기
 2.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현상유지보다 현상수정을 추구하는 관점(이근욱 2019) => 국제지위 상성의 욕망 (Ward, 2013)
 3. 남북관계의 동인을 북한 내부의 문제와 남북한 사회의 통일인식(정체성)
 4. 북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측면 (미중관계 /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

한미연합훈련 / 대북전단 / 유엔제재

-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
- 1990.2.8. 북한, 팀스피리트훈련 기간 중 대화중단 선언
- 1992.1.7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발표 (1.16. 김우중 방북)
- 1993. 3. 팀스피리트 재개 => 3.8. 북한 준전시상태 선포(3.19. 이인모 송환. 3.24. 준 전시상태 해제)
- 1994 제네바합의 10.21. 팀스피리트 중단 합의 1997.3. 팀스피리트 취소.
- 2006 2. BDA 북한 거래 중단 발표
- 2009. 2. 대북전단 살포
- 2009.6.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시작.
- 2020년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

-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인공위성으로 주장)
- 1999년 9월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 2003년 8월 6자회담
- 2005년 9.19 공동성명 => 2006년 대포동미사일(7월), 핵실험(10월) =>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 2014년 18번의 미사일 발사, 2015년 SLBM 시험, 2016년 5차 핵실험, 2월 ICBM 실험

개성공단 / 금강산

- 금강산 1998년 11월 ~ 2008년 7월, 2003. 8월말까지 금강산 관광객수 총 53만8천여명. 2005년 6월 100만명 돌파.
- 개성공단 2003년 착공 2005년 가동/ 2007.1.30. 총생산액 1억불. 방문인원 10만명.
- 2010.1. 북한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위한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
- 2010.4. 북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물수조치
- 2013년 8월 14일 서로 타협하여 극적 합의. 9월16일 재개.
- 2016년 폐쇄
- 2019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대가없이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2021년에도 북한은 금강산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식량지원 / 재난지원

- 1993년 8월: 북한 내 식량난, 민간소요 사태 확인 (제2 고난의 행군. 탈북자)
- 1995.9.12. 유엔조사단, 북한 조사결과 발표. 수해 지역이 전국토의 75%.
- 1999.7.25. LA Times 북 210만명 아사 보도.
- 2003.5. 남북교역액이 북일교역액 추월
- 2004. 4. 용천역 폭발사고
- 2006.8. 수해 / 2007.8. 수해 / 2010. 수해 / 2011 수해(생필품, 의약품보다 식량, 시멘트 요구) / 2012.9. 수해 / 2013.7. 수해 /
- 2011.3. 백두산 화산활동 연구사업 공동추진 제안
- 2014. 5. 평양시 평천구역 살림집 건설장에서 '엄중한 사고' 발생

종교 교류

- 2011.9.19.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대표 등 24명 방북(평양·백두산)
- 2011.11. 한국기독교협의회, 천도교 평양 방문
- 2012.3. 남북 종교단체 협의(북경, 심양)/10. 금강산 신계사 복원 5돌 기념 남북불교 도합동법회/11. 천도교 방북/11.안중근기념사업회 평양 성탄공동미사계획 발표
- 2013. 11.07. 천태종,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합동법회」(개성) 11.09. 평화3000, 「평양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미사 봉헌」을 위해 방북(박창일 신부 등 12명) 12.06. 나눔인터내셔널·한국카리타스·섬김 등 3개 단체의 北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 및 환자 대상
- 2014.5. 염수경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08.07. 평화3000, 남북합동미사 등 공동행사 관련 협의(개성) 08.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8.15 남북공동기도회 개최(8.13~16, 평양) 10.13. 신계사 영통사 복원 기념 남북합동법회 개최 11.10. 원불교

- 2015. 03.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北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부활절 공동기도문 발표
- 10.23.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장충성당 남북공동미사 참석차 방북(10.23~27, 평양·묘향산)
- 12.0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가톨릭 신자 교류, 평양 장충성당 보수, 북한과의 교류 협력 방안 등 협의
-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 2018년 10.09. 청와대, 평양 정상회담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언급. 10.18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시 평양 초청 의사 전달.

30년 중 가장 위험했던 시기

- 2010년? 2013년~2015년
- 03.29. 0시 30분 北 김정은,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계획 최종 비준 03.30. 北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발표 -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돌입, 군사적 도발시 전면·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 등 위협
- 04.03. 北, 개성공단 출경 차단(입경만 허용) 04.08. 北 김양건 당 비서, '개성공업지구사태와 관련한 중대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담화 발표- '△개성공업지구 종업원 전부 철수 △개성공업지구 사업 잠정중단, 존폐여부 검토'
- 04.05. 北 외무성, 평양주재 외교단·국제기구 등에게 4.10까지 출국 권고
- 04.09. 北 아태 대변인 담화 - '남한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 세워야 할 것' 위협
- 05.22.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訪中(5.22~24)
- 06.18. 北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방중, 북중 전략대화 개최(6.18~22)

- 2014년
- 02.21. 北,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02.27. 北 탄도 미사일 4발 발사
- 03.05. 北 통지문(北 국방위 → 南 국가안보실) - 우리측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측의 비방증상 합의 위반 주장
- 03.26. 北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2.21~ 3.26간 미사일·로켓 총 90발 발사)
- 03.26.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의 파국적 후과' 위협
- 04.14. 北 조평통 서기국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을 '제2의 천안호 사건 날조'라고 주장
-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 9월 5차 핵실험 / 9월 싸드 배치 부지 발표 / 11월 북한이탈주민 3만명 돌파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

한중관계 / 북중관계

- 1992 한중수교, 1994.12.15. 정전위 중국대표단 철수 1995.10.5. 중국외교부 대북 30억 긴급원조 제공 발표
- 2000.1.15. 김정일 상해 등 경제특구 시찰 / 2002.9.12. 신의주 특별행정구
- 2003. 4.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중국방문 10.29 김영남/우방귀 회담.
- 2004. 4. 김정일, 후진타오 정상회담
- 2010.2. 왕자루이 중 당대외연락부장 평양방문(김정일 면담) / 김계관 방중 / 2010.5. 김정일 방중 2011.5. 김정일 방중 2012.11. 김정은 시진핑에게 축전.
- 2015. 10.31. 한-중 정상회담, 북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양국 소통 강화 합의
- 박근혜 정부 망가진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 북한의 기대, 2002.5. 박근혜 의원 방북) => 2016년 THAAD 이전과 이후, 2016년 이전과 이후 북중관계
- 트럼프 정부(미중갈등) 이후 달라진 북중관계, 남북관계
- 2022년 9월26일 북중 화물열차 중단 150일 만의 운행 재개.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

김정은 성격 / 김정일 성격 (유훈통치)

- 교육배경의 차이?
- 김일성의 유훈에 대한 입장 차이? 1997.7.9.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 발표
- 북한 내 신구세대의 문제?
- 북의 대남 사과: 1996.12.29. 잠수함침투사건 사과 성명.

북이 받았던 시그널

- 미국의 비핵화 정책
-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 2006년 부시행정부의 정책과 최악의 시그널

남북한 내의 기류 (미국)

- 1992년 10월5일 안기부 조선노동당 62명 간첩단 구속 (동일 북한 전문 22조의 조선 외 국인투자법 채택)
- 1994. 7. 조문논쟁 (※북억류자, 미군유해 송환)
- 1996.02.12. 북한 유엔 대표부, 국제 쌀 지원 선별 수용 방침: 군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 국가간의 쌍무적 지원은 종전과 같이 받아들여지되 국제 구호단체들의 원조는 선별 수용할 것임.
- 1996. 4.5.-7. 북풍 (판문점 공동구역 무장 진입) 4월11일 15대 총선
- 1997.2. 황장엽 망명.
- 1998.2. 김종필 6자회담 제안. (보수의 제안이 갖는 의미)
- 2002.7.1. 북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9.12. 신의주 특별행정구
- 2003. 5월말까지 504명의 북한 이탈주민 입국 / UNHCR 중국내 탈북자 10만명 / 8.4. 현대아산 정몽헌 자살 / 2003년 말까지 탈북자 1281명.
- 2009.11.30. 북한 화폐개혁
- 2018년 이후 김정은, 김여정,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서로 다른 성명의 강도

- 남한 / 북한 / 미국 내에서 Two level game의 작동
- 남한
 - 탈북자의 증가
 - 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북한에 대한 정체성, 정서적 유대감의 강도, 통일기대이의 (이내영, 2014) 남북관계의 여부(김규철, 2022), 경제안정의 정도 (정동준, 2018) 정치적 성향에 따른 통일, 대북인식의 양극화(정동준, 2016)
 - 대형사건이 발생하면서 통일의식 차이가 좁혀지는 현상(김병로, 2017)
 - 2000.4.21. 미국 골드만삭스 보고서: 남북한 통일비용 최대 3조 5500억 달러 전망
- 북한
 - 시장화, 소득분화, 의식변화 (박명규, 장용석, 정은미, 송영훈, 2014): 10년 이 내 통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44.4% 증가 (2013) 규범적 정당성은 인정. 현실에는 회의적.
 - 구세대, 신세대의 서로 다른 인식 (군부와 일반인)
-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미국 내 매파와 비둘기파의 서로 다른 인식.

통미봉남

- 1995.1.16. 북한외교부, 서류상 명기 않으면 한국형 경수로 수용.
- 1995.3.10. 김영삼 정부 대북물자 지원 거부. 5.26. 일본에 쌀 공급 공식 요청. 10.14. 김영삼 대통령 NYT 회견에서 북일 쌀 교섭이 통일 방해한다고 언급. 1996.1.24. 정부 차원 대규모 지원 안하기로. 1996.2.2. 북한 일본에 추가식량지원 요청. 2.12. 북유엔 대표부, 국제 쌀 지원 선별수용 방침. 6.11. 대북 6백만 달러 지원
- 2002.9.17. 고이즈미 방북.
- 2024.1. 북한의 일본 지진 조전
- 2006년 부시행정부의 정책과 최악의 시그널

30년 간의 변화: 결론을 대신하여

- 30년 전 현상유지(분단) vs. 현상수정(통일)
- 지난 30년의 결과: 현상수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커졌을 가능성.
- 연속성:
 - 긴장과 협력의 지속: 남한, 미국의 정권 변화
 -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긴장관계는 계속: 1999.8.26. 서해상 군사분계선 선언. 서해교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 북한 내부의 지속적 재해와 사고=>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또는 외부와의 연결 지속성 가능

30년 간의 변화: 단절성

- 변화
 -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는 한 차원 높아진 협상테이블.
 - 북의 대외적 자신감: 핵과 미사일, 북중러 관계의 복원, 북미 정상회담, 일본에 대한 전문(2024년 1월), 6자회담의 실패
 - 리더십의 변화: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
 - 남한의 부정적 대북인식 강화: 북한의 상황, 김정남 사건, 탈북자 문제
 - 북한의 대내적 자신감(위기 극복) + 내부 세대 간 차이 (?)
 - 미국의 흔들림과 한중관계의 높은 변동성

30년 간의 변화를 통해 본 핵심 접근방향

- 변화의 어려움: 핵, 미사일, 두 번의 상황 급변(2008, 2020)
-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중요성: 2000년 이후 모든 남북 간 접촉이 이루어졌던 지역. - 문재인 정부에서 재개하는데 실패
 - 앞으로 가능할 것인가?
 - 새로운 모색의 가능성 - 해주, 원산(2007.6), 심지연-백두산(2007.11. 사전답사)
- 한중관계, 북미관계를 통한 접근
- 인도적 차원에서의 종교계의 접근 (민족적 입장, 중국과의 연결 가능성)

관계 재개의 필요성

- “조급할 필요가 없다” 또는 “시급하다” => 문제는 “어떻게”
 - 특사: 1994.6. 카터 방북
 - 보수 정치세력의 역할: 남한 내 여론 문제 (98년 김종필의 제안)
 - 기업 역할 (1989.2.2 정주영 방북. 1992.1.16. 김우중 방북, 1998.6. 정주영 소 5백마리)
 - 학회 역할: 조선역사학회(1989년), 백범기념사업회(1997.5), 개성 역사유적, 안중근 유해발굴(2006.3)
 - 스포츠 행사 역할
 - 교회 역할은? 김선필, “한국 천주교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찰과 노력”, 2023
- =>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 스타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 교회의 역할과 과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나?” (2사무 7, 5b)

변진홍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자문위원)

〈목차〉

- I. 반성적 고찰: 은총과 시련
- II. 순교 영성의 소환과 평화 영성 구축
 - 1. 한국교회의 전통적 영성
 - 2. 순교 영성의 소환
 - 3. 평화 영성의 구축
- III. 한반도 ‘두 국가론’과 민족화해
 - 1.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 2. ‘적대적’ 인식의 ‘평화적’ 전환
 - 3.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민족화해의 진로
- IV.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과 교회
 - 1. 평화의 새 지평: 비정상적 정상화
 - 2. 한반도 ‘두 국가론’과 교계제도
 - 3. 동아시아 선교지침: 선교적 적응의 중요성
- V. 맺음말: 한국교회의 과제

I. 반성적 고찰: 은총과 시련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해인 2025년은 한반도 분단 80년을 헤아리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갈라진 북녘 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기점인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출범 40주년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서도 서울대교구 민화위가 설립된 1995년은 민족 분단이란 가혹한 운명 속의 남과 북, 그리고 특히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속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만남의 단초(端初)를 이룬 해이기도 하다. 실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¹⁾의 길을 여는 은총의 길이다. 이런 뜻에서 볼 때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길을 걸어온 지난 30년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은총의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련의 시기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서, 과연 ‘화해의 실천’이 ‘일치의 결실’로 제대로 이어졌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선한 의도와 달리 그 맥락이 ‘따로따로’ 분리되고, 심지어 서로 엇갈리는 등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은 없는가. 단적인 예로, ‘민족 화해의 실천’으로 대변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를 전후한 만남의 모습이 정작 ‘민족의 하나 됨’이라는 ‘일치의 길’과 엇나가거나 제대로 조화를 이루었는지, 혹시 이를 외면하거나 역행하는 경우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2015년에 ‘남북한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교회 구성원 전반, 즉 성직자·수도자·신학생·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2005년에 실시한 ‘북한 복음화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0년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 조사의 성격을 지녔다.²⁾ 당시 실무적으로 이 조사를 책임지고 진행했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전원 신부는 조사 결과³⁾에 대해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 북한 복음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고, 교회 구성원들 역시 이에 관한 의식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안고 사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신학적, 영성적 기반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라고 진단했다.

만약 이 진단이 사실이라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실천 영역에서 걸모습은 화려했지만, 정작 속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적 열정은 더 이상 없고 자아도취와 자기만족의 공허한 쾌락만이 남”⁴⁾는 영성의 결핍, 또는 “영적 세속성”⁵⁾에 매몰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의 영성 결핍이나 결여 현상은 마치 우리 자신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궁극 목표인 ‘평화의 왕국’, 즉 하느님 나라 건설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한 것과 다름없다. 하느님 나라 건설은 그분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⁶⁾란 말씀을 따라 오직 그분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와 헛되리라.”⁷⁾는 시편의 말씀을 되새겨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화해와 일치의 참된 영성을 찾는 지름길이다.

1)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는 1989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198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0월 8일에 개막된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장엄미사 강론, “분열 극복 통하여 참평화 실현 하자”에서 “찬미 예수! 여러분의 서울에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회를 피력한 후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말씀이 이 대회의 주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동과 서가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들 분열은 역사와 이데올로기 분쟁의 유산입니다. 흔히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없었던들 서로 평화로이 사이 좋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한국도 분단의 비극이 그 특징을 이루어, 한국민의 삶과 성격에 갈수록 더욱 깊이 사무치고 있습니다. 갈라졌으나 아직은 평화와 정의 속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상징적 존재가 한민족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제44차 세계성체대회 문화분과위원회 편,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 일선기획, 1990, 12-13.

2)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 천주교인 통일의식, 무엇이 변했고 어디로 갈 것인가?”, 『201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 2016.6.10.

3) 같은 심포지엄 자료집, 85-86.

4)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93-97항.

5) 같은 책, 84.

6) 예레 31, 33.

7) 시편 127, 1.

II. 순교 영성의 소환과 평화 영성 구축

1. 한국교회의 전통적 영성

한국교회의 전통적 영성은 순교적 영성, 내세-종말론적 영성, 그리고 사주구령적(事主救靈的) 영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장 심상태 몬시뇰은 신앙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순교적 영성이 “박해 후에는 현세를 무상한 여정으로 간주하면서 현세에서 착하게 살아 복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내세에서 영복을 누릴 수 있다는 내세-종말론적 영성,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성사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형성된 사주구령적 영성”⁸⁾으로 이어져 왔다고 본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전통적 영성의 흐름이 대체로 구조적 차원을 강조하는 사회구원보다 개인 구원에 치중하는 성향으로 변모해온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교회의 전통적 영성 흐름은 1960년대 이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영성⁹⁾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분출된 급격한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변화과정은 종래의 개인 구원 중심의 영성을 사회구조적 불의에 저항하는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하는 동력을 제공했다. 즉 교회가 억압적인 지배체제에 맞서 이에 따른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인철은 이와 같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1970-1980년대에 용감한 시민사회 대변 기능으로 인해 형성된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social image)와 높은 사회적 공신력(social credibility)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로 인해 교회의 정치적 역할을 전문적 사회운동 단체들과 정당이 상당 부분 대체해 간 이후에도 20년 넘게 교회의 소중한 문화적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⁰⁾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세기 후반의 사회적 영성은 초기 한국교회의 순교 영성과 궤를 같이한다. 사회적 영성은 분단의 벽을 넘어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길을 열어나가는 시대적 소명으로 연결, 확장되었다. 따라서 민족화해의 영성은 전래의 순교 영성과 현대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사회적 영성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이 시점에 ‘순교 영성의 소환’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순교 영성의 소환

근 100년 동안 이어진 박해 시대의 천주교 신자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학도로 단죄된 국사범이었다.¹¹⁾ 이들은 배교하지 않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사실 죽음도 죽음이지만, 어쩌면 무

8) 심상태, “한국교회 영성의 현주소와 전망”, 『사목』 27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22-23.

9) “이를 테면 1960년대 이래 일부 성직자와 평신도를 중심으로 인권, 정의, 공동선, 민주화,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신하는 데서, 또 전통적 사회 복지 활동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영성이 형성되었다.” 황경훈,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운동의 영성: 그 가능성의 탐색과 제안”, 『누리와 말씀』 37, 인천가톨릭대학교, 2015, 187.

10) 강인철, “정치적 대립과 종교적 통합의 동학(動學): 군사정부 시기의 교회와 국가”, 『신학전망』 171, 광주가톨릭대학교, 2010, 143.

11) 국사범이란 한 나라의 정치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형사상으로 내란죄·외환죄·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해당할 것이다. 차남희는 첫 번째 박해인 신해박해의 원인이 된 제사 금지와 이에서 비롯된 조상의 신주 소각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주자학을 정학으로 규정된 조선 사회에서 주자학은 정통의 기반이었고, 통치이념이었으며, 종교를 대

막대한 고문이 더 두려운 것일 수 있었다. 달레는 “1790년 구베아 주교의 제사 금지 통보로 인해 야기된 1791년 신해박해의 경우 특히 정조 임금의 이 사태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든 수단을 써서 신자들을 배교시키도록 하교하였다.”¹²⁾고 밝혔는데, 정조의 이 조치는 겉으로는 유효적인 듯 비치지만 오히려 고문의 잔학성을 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박해 후에는 다시 신입 교우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박해가 줄줄이 꼬리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신입교우들은 곤궁에 빠지고, 다른 주민들의 눈에는 치욕의 대상이 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라, 지독히 집착하는 정권에 조그마한 위협도 될 수가 없었으니,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면, 확실히 그 때에 조선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¹³⁾이란 탄식을 자아냈다.

실제로 박해 후에 남겨진 신자들의 모습은 더더욱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잃고, 이웃으로부터도 배척받아 더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¹⁴⁾ 1815년에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일어난 을해박해는 1814년에 닥친 전국적인 기근의 여파로 교우들의 재산을 노린 이웃의 탐욕과 지방관의 결탁으로 야기되었다. 이처럼 온갖 형태의 불의한 욕망, 사회 구조 자체의 희생 대상으로 전락한 채 박해 시대에 천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순교였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남북한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 내 이념적 갈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주자학적 질서를 부정하고, 통치이념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갈등 구조의 한복판으로 내몰렸다.¹⁵⁾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족 등 주변 모두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갈등에 굴복하지 않으면, 모든 기득권의 박탈과 죽음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이념 갈등 상황을 박해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이해와 선택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신앙의 선택에 따라오는 삶의 방식, 그 기준이 되는 이념의 속성이나 형태가 현세적 질서와 기득권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질서에 기인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설사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극한적인 편견과 불신, 그리고 혐오의 길로 치닫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또 스스로 순교 영성의 계승을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순교 영성 속에서 자신과 상대 모두를 치유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한 도덕이고 윤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로, “이는 조선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차남희, “정약용에 의한 천(天) 개념의 변화와 18세기 주자학적 질서의 비판”, 『담론 201』 9(1),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7-8.

12)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교회사』 상권, 분도출판사, 1979, 363.

13) 같은 책, 619.

14) 박해를 치르고 난 바로 뒤의 조선 천주교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비참하고 붕괴된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루 다 말하기는 어렵다. 敎兄들을 지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할만한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사형을 당하였다. 名門巨族 중에는 여자와 아이들만이 남아있는 집안이 많았다. 천주교의 狂的인 원수들이 애써 잡으려 들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과 천민들은 서로 연락도 없이 뿔뿔이 헤어져, 敵意로 가득찬 外敎人들 틈에 끼어 살게 되니, 이들은(외교인 *필자 주) 법과 일반 여론으로 큰 힘을 얻어, 신자들을 천만 가지로 괴롭히고, 그들을 종과 같이 다루었다..... 관청에서 귀양을 보낸 사람들이나 자진하여 아주 멀고 궁벽한 지방으로 이사하여 간 사람들의 처지는 훨씬 더 비참한 것이었다.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교회사』 중권, 분도출판사, 1980, 10.

15) “주자학을 정학으로 규정한 조선 사회에서 주자학은 정통의 기반이었고, 통치이념이었으며, 종교를 대신한 도덕이고 윤리였다. 18세기 천 개념의 변화는 학문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질서와 도덕성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다.” 차남희, “정약용에 의한 천(天) 개념의 변화와 18세기 주자학적 질서의 비판”, 『담론 201』 9(1),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7.

3. 평화 영성의 구축

평화 영성은 민족화해 영성의 지표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목표 지점을 선명히 드러낸다. 평화의 출발점은 인간 존중과 사랑이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인 인간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순교 영성의 측면에서 조명하면, 어떤 여건에서도 우선 먼저 ‘나’의 입장(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를 기꺼이 맞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순교 영성은 평화 영성의 바탕을 이룬다.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모든 갈등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思考)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불신의 덩어리’가 그 끝판왕이다. 이를 뛰어넘는 ‘사랑→화해→평화→공존→일치’의 길이 평화 영성의 로드맵이다. 평화 영성은 민족화해 영성을 현실과 연결 짓고, 그 풀 갖춤의 길을 열어 주는 길잡이이다.

존 F.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첫 가톨릭 대통령이다. 그는 1963년 6월 10일에 워싱턴DC에 있는 American University 졸업식에서 ‘평화의 전략’이란 제목의 연설을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의 전쟁 무기가 세계에 강제하는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평화도 아니며, 노예적인 안전도 아닙니다. 본인이 말하는 평화는 순수한 평화, 지구상의 삶을 살 보람이 있게 해주는 평화, 세계의 인류와 국가들이 성장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한 보다 좋은 삶을 바라고 건설할 수 있게 해줄 평화 - 단순히 미국인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우리 시대의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평화입니다.¹⁶⁾

케네디의 이 연설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공산주의자 색출이란 홍역으로 미국 조야를 뒤흔든 매카시즘의 여진이 남아있고, 여기에 더해 1962년 10월에 불거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해 절정으로 치달던 미·소 전략경쟁의 한 복판에서 발표되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무엇보다 먼저 평화에 대한 무관심을 경고한다. 동시에 그 무관심이 상대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을 파생시키는 갈등 구조의 산물임을 지적하면서 “소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검토”¹⁷⁾해 볼 것을 제시했다. “소련 지도자들이 보다 개인 태도를 취할 때까지는 소용없으리”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케네디는 “우리의 태도는 그들의 태도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¹⁸⁾

결국 평화 영성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던 인식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로 나아가는 길, 즉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나서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당신을 가두어 두려는 우리의 진부한 도식을 깨뜨리실 수 있고, 하느님이신 당신의 끊임없는 창조력으로 우

16)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s://kr.usembassy.gov/ko/john-f-kennedy-american-university-address-1963-ko/> (검색일: 2025.5.20.)

17)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s://kr.usembassy.gov/ko/john-f-kennedy-american-university-address-1963-ko/> (검색일: 2025.5.20.)

18) “이는 소련인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왜곡되고 절망적인 면만을 보지 말라는,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화해를 불가능한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그리고 의사 전달을 단순한 위협의 교환으로만 보지 말라는 미국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s://kr.usembassy.gov/ko/john-f-kennedy-american-university-address-1963-ko/> (검색일: 2025.5.20.)

리에게 놀라움을 주십니다.”¹⁹⁾라고 평화 영성의 과감함과 창조성을 강조했다.

Ⅲ. 한반도 ‘두 국가론’과 민족화해

1.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2023년 12월 30일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근본적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전면적인 ‘대남노선의 전환’을 공표했다²⁰⁾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관계에서 이처럼 평화·교류·협력의 개념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것은 충격적이다. 아무리 2019년 2월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후 불과 4년여 만에 남북관계에 대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²¹⁾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백지화한 것, 이는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충격은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이들로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선대로부터 이어져 왔고,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온 ‘통일’이란 대명제가 북한 사회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²²⁾

평화너머정책연구소 변학문 소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중장기적인 전략적 결정인 것으로 평가한다.²³⁾ 그에 따르면, 이미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2010)로 남북교류협력의 흐름이 딱 막힌 시기에 등장한 김정은이 몇 차례 남북관계 개선을 타진했지만 실패했고²⁴⁾,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기에 트럼프와 북미정상회담까지 진행했으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허무감이 강하게 작용해 이런 결정을 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김갑식 선임연구위원 역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표출된 북한의 초강경 대남정책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그 근거로 ① 김정은의 입장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년간 차곡차곡 누적 정리된 점, ② 김정은이 남북관계가 반세기 넘도록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면 선대의 정책 실패까지 언급한 점, ③ 김정은이 한국의 ‘주적론’과 헌법 영토조항을 거론하면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조’는 계속 유지했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정은의 정책 전환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했다.²⁵⁾

19) 『복음의 기쁨』, 11항.

20) 김진하 외,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24-01, 통일연구원, 2024, 17.

21) 통일부 홈페이지 <https://dialogue.unikorea.go.kr/ukd/c/ca/usrtalkmanage/View.do> (검색일 2025. 5. 20)

22)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2025년 4월 East Asia Peace Forum 2025에서 진행된 발표와 토론에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선언이 당의 결정으로 공식화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 사회 하부구조의 치열한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정대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 방안”,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자료집, East Asia Peace Forum 2025, 2025.4.11.-12, 11-31.

23) 변학문, “1991년 체제의 종말, 평화 주권 실현에 집중할 때”,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자료집, 1-10.

24) 변학문은 같은 발표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북 최고위층 3인방 방남,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관련 남북 합의, 2018년 판문점/평양 합의”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25) 김갑식,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근본적 방향전환의 함의”, CO 24-04, 통일연구원, 2014.1.9., 1-2.

그럼에도 한편으로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0월 8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에서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²⁶⁾라고 언급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적대적’이란 용어에서 비롯된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 고조를 완화 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2. ‘적대적’ 인식의 ‘평화적’ 전환

인류는 언제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를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견해 왔다. 김정은 총비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가 전략적 선택이라면, 더욱이 ‘두 국가론’ 앞에 ‘적대적’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기인²⁷⁾한 것이라면, 해법의 방향은 명료하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이를 전환시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육식 평화연구소장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관계론’ 회복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²⁸⁾ 특수관계론의 바탕을 이룬 통일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한반도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특수관계론의 핵심이었던 ‘민족 내부 거래’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경로, 즉 ‘두 국가론’을 전제하면서 ‘특수관계론’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두 국가론’ 구조를 객관적으로 살펴 서로의 입장을 진단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상생의 해법 가능성을 찾는 것이 급선무란 설명이다.

이 접근법은 19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의 입장을 살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던 방식과 통한다. 불행히도 미국과 소련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그가 암살되면서 잠시 길을 잃게 되지만, 얼마 안 있어 꽃을 피운다. 닉슨독트린(1969)을 탄생시켜 본격적인 미·소 데탕트 시대를 연 헨리 키신저가 장본인이다. 키신저는 소련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이와 연관된 한반도 문제의 해법까지 강구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²⁹⁾라는 국제관계 방정식을 제기했다.

키신저 방식의 해법은 정상적인 형태의 ‘한반도 두 국가론’을 탄생시키고, 이를 주변 열강이 승인해 동북아 질서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평화 구상의 원조인 셈이다. 실제로 키신저는 197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및 북한의 동맹국이 對한국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면, 한국과 미국도 그것에 상응하는

26) 이승현, “김정은, ‘무력사용 기도시 핵무기 사용’...‘허세로 오해하면 더 처절한 대가 치를 것’”, 통일뉴스, 2024.10.8.
 27) 김여정 부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곧장 2025년 3월 초에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해 이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계승”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여정 부부장은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 2일 부산작전기지에 들어온 데 대해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계승》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같이 실제적인 행동적 조치들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라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김여정, ‘美 대북적대 여전... 위협 느낄만한 전략적 행동할 수 있다.’”, 통일뉴스, 2025.3.4.
 28) 정육식, “리셋 남북관계: 탈북한의 상상력과 이기이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자료집, 40-54.
 29)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는 때로는 남북한이 1972년 7월 합의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때로는 남한 정부의 ‘당사자주의’로, 때로는 북한 정부의 ‘우리민족끼리’ 원칙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다.” 박순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사회과학연구』 25(1),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46.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³⁰⁾고 밝혔다. 유엔에서 중국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이른바 4대국 ‘교차승인’ 방안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한반도 분단구조를 평화공존 구조로 전환시켜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이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4대 강국의 교차 승인이 성사되었다면,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의 향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아무도 모른다.³¹⁾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수식어를 떼어낸 한반도 ‘두 국가론’은 그 뿌리가 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1990년대 초에 유엔에 동시 가입함에 따라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de facto) 자체가 이미 ‘두 국가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대진 역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연합’이란 ‘평화적 두 국가’ 상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용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³²⁾

3.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민족화해의 진로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민족화해의 진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민족화해와 일치의 대상인 북한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근원적 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한반도 ‘두 국가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는 민족화해와 일치를 향한 복음적 접근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 한반도 ‘두 국가론’이 객관화될 경우, 우리 교회 역시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그만큼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한반도 ‘두 국가론’은 단순한 통일 패러다임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관계 자체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두 국가론’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지칭했던 ‘특수관계’를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심리적 자산과 담보가 상실’³³⁾되는 새로운 남북관계 환경 변화에 맞닥뜨리게 된다. 북한이 ‘두 국가론’ 선언 후 ‘통일’과 ‘동족’이란 개념을 지우고 있는 현실로 인해 남과 북의 보통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충격이 이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준다.

아직은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한 현실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나 ‘두 국가론’의 현실적 의미가 구체성을 띠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내에서도 논란과 갈등을 비켜 가기 힘들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관계에서 ‘동족’의 개념을 벗겨버리게 되면, 민족화해적 접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일게 될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갈등을 피하기 어

30) 조준형, “美日中蘇의 남북교차승인 유엔서 제안... 키신저의 한반도 인연”, 연합뉴스, 2023.11.30.

31) “결국 1991년 탈냉전의 흐름을 타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성사됐지만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은 아직 북미, 북일 수교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미완에 그쳤다. 더욱이 키신저가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았던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한 지금은 교차 승인이 더욱 요원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기 전에 키신저의 교차승인 구상이 실현됐다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지형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준형, 연합뉴스, 2023.11.30.

32) 정대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 방안”, 18-24.

33) “2018년 12월 체육회담을 끝으로 현재까지 남북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대화만 단절된 것이 아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북 간 선박·항공기·철도 왕래는 0이다. 2021년부터는 사람도 차량도 왕래가 완전히 끊겼다. 1989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이산가족 생존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남북의 정서적 유대도 희미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제로’는 아니다. 인도적·협력적 왕래가 끊긴 자리엔 대북 전단 풍선과 대남 쓰레기 풍선이 오가고 있고 시끄러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고요한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북으로 향하고 있다.” [정육식 칼럼] 한겨레신문 2024. 8.11.

렵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동력을 잃게 된다. 북의 입장에서도 동포애를 내세워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민족화해적 접근에 가해지는 내외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타개해 나가야 할 새로운 미래, 그 미래의 현실적 의미와 한계는 갈수록 보다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IV.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과 교회

평화의 새 지평: 비정상적 정상화

한반도 ‘두 국가론’은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여는 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등한 국제관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국제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화해의 영성도 상호이해와 포용 그리고 상생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맥락이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평화통일을 대전제로 내세운 남북관계가 상호이해보다 대립과 적대의 세월을 더 많이 보내온 모습을 정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는 비정상이다.

사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기 반세기 전에 그 문을 먼저 두드린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에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면서 ① 남북 간 상호 내정불간섭과 상호 불가침, ②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③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 ④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대한민국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 7개 항의 <6.23 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6.23선언을 특별성명으로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를 언급했다. 즉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³⁴⁾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이를 “2개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극렬히 비난했다. 즉, “<6.23 선언>에 대해 북한이 ‘2개 조선’ 조작 책동이고 분열주의 노선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옴으로써, 이후 남북 간에는 ‘유엔 동시가입’과 ‘단일 의석 가입’이 대립하는 양상을 빚게”³⁵⁾ 되기 때문이다.

이후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쳐 1991년 9월 17일에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했다. 유엔 가입은 ‘주권을 지닌 독립 국가’를 기본조건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두 주권을 지닌 국가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인 동시에 남북한 모두 서로의 실체와 존재 양식을 인정하고 수용했음을 뜻한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비정상적 정상화’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에 맞물린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외적인 변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 ‘두 국가론’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다. 결국 한반도 ‘두 국가론’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어

34)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3_0060 (검색일 2025.6.10.).

3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450&sitePage=> (검색일 2025.6.10.).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퍼즐인 국제환경의 개선, 즉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문호 개방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상태를 종착점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산을 넘어야 ‘평화적 민족통일’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이룰 수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두 국가론’에 생명력을 부여할 북미·북일 관계 개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의 6자회담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2003년 8월 27일에 시작된 회담은 2년만인 2005년 9월 19일에 첫 결실을 거두었다. <9.19 공동성명> 2항에서 북미 간 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일 간 관계 정상화를 함께 약속한 것이다.³⁶⁾ 그런데 합의 직후 미국이 BDA(Banco Delta Asia)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돌이 격화되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연히 회담은 파탄 위기로 치달았다. 이때 러시아가 중재에 나서면서 2007년 2월 3일에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일명 <2·13합의>)를 이끌면서, 이를 뒷받침할 실무 그룹 설치에 합의해 회담을 기사화생시켰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한국에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등장해 남북관계의 퇴행이 거듭되면서 6자회담 자체가 동력을 잃게 된다.³⁷⁾ 만약 이 당시 6자회담에 임했던 미국이 잠시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1963 평화 전략 구상’에서 밝힌 모습, 즉 “미국인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우리 시대의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평화”에 집중했다면, 이미 10년 전에 한반도 ‘두 국가론’은 그 정상화의 과정을 매듭짓게 되었을지 모른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 개막은 그 첫걸음으로 한반도 ‘두 국가론’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내외의 비정상화 덩어리를 빠져나와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한반도 ‘두 국가론’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이를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착시 현상도 벗어나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를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표출하면서 한반도 ‘두 국가론’의 실제적 의미보다는 이를 제기한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2기 출범 후 개선의 여지를 보였던 북미 관계 역시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점에서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대내외 변화를 이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한반도 ‘두 국가론’이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일단 이로부터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나갈 방도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안에서 한반도 ‘두 국가론’을 통해 일단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로워져 보자는 실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욱식은 이를 이기이관(利己利關)의 접근, 즉 “나부터 이롭게 하면서 관계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접근으로 표현했다.³⁸⁾ 남북한이 그동안처럼 서로를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갈등에 힘

36)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3_020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6%EC%9E%90%ED%9A%8C%EB%8B%B4%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6%EC%9E%90%ED%9A%8C%EB%8B%B4%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6%EC%9E%90%ED%9A%8C%EB%8B%B4%27%7C1%7C0%29+%7D (검색일 2025.6.10.).

37) “2008년 이후 남한의 보수 정권 등장, 북한의 대 남·대미 강경정책,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의 발생, 북한의 권력세습, 남북관계의 후퇴와 단 절,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 형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심화 등으로 한반도 분단체제의 재강화와 한반도-동북아 안보의 불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여름에는 한반 도에서 심각한 전쟁 위기조차 발생하였다.” 박순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사회과학연구』 25(1), 39.

38) 정욱식, “햇볕정책까지 내려놓고...대북정책, 백지서 다시 시작해야”, 한겨레, 2024.10.1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2328.html> (검색일 2025.6.10.)

을 쏟기보다 오히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각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 결국은 서로의 관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찾자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 32)라는 말씀을 찾아가는 길인지도 모른다. 서로 자유로워지는 실험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상생의 길’ 모색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과 북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신뢰와 여유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길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여는 첩경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충실히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나’를 내려놓는 순교 영성, 그리고 상대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발견하는 평화 영성, 그리고 이를 묶는 민족화해 영성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 순서이다.

2. 한반도 ‘두 국가론’과 교계제도

한국 천주교회의 교계제도 설정은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 이후 131년만인 1962년 3월 10일에 이루어졌다. 교계제도 설정으로 서울대목구를 비롯한 11개 대목구가 정식 교구로 승격된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교황청 직속 선교지로부터 교회법적으로 완전한 체계를 갖춘 지역교회로 거듭난 것을 뜻한다. 그동안 대목구장들은 교황의 이름으로 교구장 직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본인의 이름으로 재치권을 행사하며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이때 북한지역 교회 역시 평양교구로, 함흥대목구는 함흥교구로 승격되었다. 다만 북한지역에는 교계제도가 붕괴한 상태이므로 남한 지역에 각각 교구장 서리를 두게 된다.

평양교구는 1943년 3월에 제6대 평양대목구장으로 임명된 홍용호 주교가 1949년 5월 14일 서포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첫 종신자 서원 면담 후 귀가하던 중에 납치 실종되었고, 한국전쟁 후 유엔군에 의해 평양이 수복되었어도 홍용호 주교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교황청에서는 1950년 11월 20일 홍용호 주교를 대신하여 메리놀회 캐롤(G. Carroll, 安) 신부를 평양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는데, 1962년에 한국 천주교회 교계제도 설정 시 교황 요한 23세는 이때까지도 홍용호 주교의 생사가 불분명하므로 “앞으로 나(교황)의 권한으로 다시 조치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평양대목구장 서리인 캐롤 몬시뇰을 평양교구장 서리로 임명했다.³⁹⁾ 캐롤 안 몬시뇰은 평양교구장 서리직을 사임하고 본국인 미국으로 귀환했는데, 교황청은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이를 승계토록 조치해 이후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서리직을 겸임해오고 있다.

함흥교구의 경우는, 1940년 1월 12일에 원산대목구에서 분리 설정되면서 함흥대목구장을 겸임했던 보니파시오 사우어(Bonifatius Sauer, 辛 上院) 주교아빠스가 1949년 5월 9일 밤에 덕원수도원에서 루치오 로트 원장 신부·아르놀포 솔라이히 부원장 신부·덕원신학교 철학 교수 루페르토 클링자이스과 함께 체포되어 원산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평양으로 이송된 후 1950년 2월 7일 평양감옥에서 옥사, 순교하게 된다. 이후 교황청은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아빠스의 사망을 확인하고 1952년 5월 9일 티모테오 비털리(Timotheus Bitterli, 李成道) 몬시뇰을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및 함흥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1962년 한국 천주교회 교계제도 설정 시 교황 요한 23세는 “현하의 사정

39) 변진홍, “분단 시기의 북한 천주교회- 그 존재 양식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중심으로”, 『기쁨과 희망』 24(겨울),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2019, 144.

이 허락하지 않으므로”라는 단서를 달며 함흥대목구장 서리인 비털리 몬시뇰을 함흥교구장 서리로 임명했다. 이후 1981년 5월 22일에 왜관 분도수도회 이동호(李東鎬) 플라치도 아바스가 3대 함흥교구장 서리에 임명되었는데, 2005년 11월 21일에 교황청으로부터 현직 춘천교구장이 당연직으로 함흥교구장 서리를 겸임토록 함에 따라 장익(張益) 십자가의 요한 주교가 제4대, 2010년 1월 28일에 김운회(金雲會) 루카 주교가 제5대, 2020년 11월 21일에 김주영 시몬 주교가 제6대 함흥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다.⁴⁰⁾

여기서 북한 교회의 교계제도상 존재 양식과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교황이 평양교구와 함흥교구 서리를 임명할 당시 각각 “앞으로 나(교황)의 권한으로 다시 조처할 때까지”, “현하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므로”라는 단서가 달려있다는 점이다. 평양교구의 경우는 홍용호 주교 행방불명으로 인한 최종 서거일이 확인되지 않았었고,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아바스의 경우에는 사망일까지 확인되었지만, 북한에 교구장을 둘 수 없는 사정이었기에 우선 남한에 내려와 있는 티모테오 비털리 몬시뇰을 함흥교구장이 아닌 함흥교구장 서리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향후 상황 변화가 닥칠 경우, 교황의 판단에 따라 북한 교회 교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는 유보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으로 한반도 ‘두 국가론’과 북한 교회의 존재 양식 분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의 진로 모색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향후 대내외 정세가 한반도 ‘두 국가론’의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경우, 우리 교회는 이에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북한 교회의 존재 양식을 재규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에 앞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두 국가론’의 정상화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로워지는 실험을 하고, 그 신뢰와 여유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길이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여는 첩경이라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기이관(利己利關)의 지혜로운 길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동아시아 선교지침: 선교적 적응의 중요성

교황청은 1919년 11월 30일에 베네딕토 15세가 교황 서한 「Maximum illud」⁴¹⁾을 공포함에 따라 그 이전까지 ‘파드로아도」⁴²⁾라고 일컬었던 선교의 ‘국가 보호권’ 시대를 마감하고, 20세기 가톨릭교회 선교의 일대 전환기를 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동아시아였고, 그 직접적인 계기를 이룬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그리고 중국이었다. 「Maximum illud」을 통해 제시된 선교

40) 같은 책, 145-146.

41) “20세기 가톨릭 선교의 ‘대현장’이라고 불리는 베네딕토 15세의 교황 서한 「Maximum illud」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보호권 주장으로 선교지역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논쟁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선교현장에 가져다 준 물질적·도덕적 재앙의 심각성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 천명으로, 교황 요한 23세는 이 서한이 20세기 가톨릭교회의 선교활동에 새롭고 결정적인 자극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한윤식, “20세기 초반 교황청의 주요 선교지침- 베네딕토 15세의 교황 서한 「Maximum illud」과 비오 11세의 선교회칙 「Rerum Ecclesiae」, 서한 「Ab ipsis」를 중심으로-”, 『신앙과 삶』 28, 부산가톨릭대 출판부, 2013, 18-19.

42) “파르도아도 즉 보호권(padroado, patronato)이란 교황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국왕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즉 두 나라의 국왕에게 식민지 개척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식민지에서의 선교활동을 후원할 권한과 의무도 함께 말도록 한 것이다. 이 권한은 니콜라오 5세 교황의 칙서 「Dum Diversas」(1452.6.18.)와 「Romanus Pontifex」(1455.1.8.)을 통해 포르투갈 국왕에게, 알렉산델 6세 교황의 칙서 「Inter Caetera」(1493.5.3.)을 통해 에스파냐 국왕에게 보장되었다. 교황이 부여한 보호권에 따라 국왕들이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선교사 선발권과 배치권, 식민지에서의 교회 설립권, 주교 후보자 제청권, 십일조 징수권 등이 들어 있었다.” 조현범, ‘세계 교회의 흐름과 교계제도의 설정-동아시아 선교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0,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8-9.

지침의 핵심은 첫째 현지인 사제 양성을 통한 지역교회의 설립, 둘째 유럽 열강의 식민지 정치와 결별한 가톨릭 선교의 자유, 셋째 지역문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적 적응 등이다.⁴³⁾

교황청이 이 선교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인 중국의 경우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8개월만인 1946년 4월 11일에 중국 천주교회 교계제도가 설정되면서 북경대교구가 출범했다. 교황청은 베이징대교구 출범 2개월 전인 2월 18일에 칭다오(靑島)대목구장 텐경신(田耕莘)을 중국인 첫 추기경으로 선임하고, 5월 10일에 그를 베이징대교구 교구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1946년 말에 안토니오 리베리(Antonio Riberi)를 첫 번째 주중 공사로 파견하는 등 국공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의 중화민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① 중국 지역교회 설립, ② 「Maximum illud」에 입각한 가톨릭 선교의 자유란 결실을 신속히 거두었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의 공산화란 복병을 만나게 되면서, 선교지침의 마지막 조건인 ‘지역문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적 적응’에는 실패하고 만다. 무신론을 앞세운 공산정권과의 정면 대립은 앞서 이룬 2가지 조건마저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는 「Maximum illud」이 제시한 선교지침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놓는다. 즉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없이는 선교의 자유도 지역교회의 설립이나 존속도 불가능한 현실에 맞닥뜨린 것이다. 중국 공산화로 인한 이러한 현실 상황은 중국교회뿐 아니라 남북 분단과 북한 공산화가 초래된 한국교회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그렇지만 재북교회 교구장 서리를 두고 있는 한국교회는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힘입어 북한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적 적응’ 실험에 나서는 상황을 맞이했다. 1988년 6월에 ‘조선천주교인협회’를 설립하고, 3개월 후에 평양 장충성당을 건립한 것이다. 이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남북관계 개선이란 역사적 흐름을 민족화해 운동이란 그릇에 담아 「Maximum illud」 선교지침의 첫 번째와 최종 목표인 정상적인 교계제도 설립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집중시켜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중국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 처한 한국교회라 하더라도 결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통해야만, ‘현지인 사제 양성을 통한 지역교회의 설립’, 즉 상주 사제 문제 해결 등 북한 교회 교계제도 정상화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게 된다. 특히 2020년 이후 남북관계가 전례 없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이를 극복해 나갈 방도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여기에 한반도 ‘두 국가론’을 놓게 되면 더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한국교회의 ‘교구장 서리’ 체제 자체가 「Maximum illud」의 첫 번째 선교지침인 ‘현지인 사제 양성을 통한 지역교회의 설립’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예고된 난관이기도 하다. 김선필이 제기했던 ‘망명 교회’⁴⁴⁾란 용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선명히 드러낸다.

43) 변진홍, “분단 시기의 북한 천주교회- 그 존재 양식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중심으로”, 『기쁨과 희망』 24(겨울), 149-150.

44)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서리, 춘천교구장이 함흥교구장 서리, 왜관 베네딕도회 아빠스가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로 임명되면서, 북한 교회는 사실상 망명 교회가 되어버렸다.” 김선필, ‘광복 이후 남북 분단 과정과 한국교회’, 『해방정국, 분단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2018, 40.

V. 맺음말: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시대의 표징’으로 선명히 드러내는 출발선이었다. 지난 30년은 은총의 시기인 동시에 시련의 시기였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은총과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서 불거진 한반도 ‘두 국가론’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쩌면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탐색해 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두 국가론’이란 잠정적 현실 앞에서 선 우리 교회의 인식과 과제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

첫째, ‘민족 복음화’란 용어 사용 병행으로 민족화해 개념의 확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민족화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 한반도 ‘두 국가론’의 정상적인 작동 구조에 적응한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확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한반도 ‘두 국가론’이 본궤도에 진입할 경우, ‘민족화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검토가 불거질 수 있다. 한반도 ‘두 국가론’이 평화를 지향하는 궤도에 진입해도, ‘통일’과 ‘동족’이란 개념을 지우고자 했던 상처는 한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 민족화해가 한반도 ‘두 국가론’ 이전에는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접근으로 현실적 의미를 지녔지만, 한반도 ‘두 국가론’ 이후에는 자칫 이를 ‘흡수통일’ 방식의 연장이 아닌가란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민족화해란 용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민족 복음화란 용어를 ‘북한선교’를 대체하는 용어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장 이동호 아바스는 1989년 당시 “현재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더 나아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실천해야 할 막중한 소명과 책임이 있음”⁴⁵⁾ 강조했다. 그의 언급은 ‘민족 복음화’가 ‘민족화해’의 모(母) 개념인 동시에 목표 지점으로서의 확장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의 성격과 방식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특히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은 단순히 교회 차원을 넘어 남한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대북 지원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을 했으며, 이에 둘러싸고 불거진 한국 사회 내 이념적 갈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와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동력을 제공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그 동력은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한반도 ‘두 국가론’이 궤도에 진입해 남과 북의 특수관계가 법적 제도적으로 효용성을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 방식은 실효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미 ‘5.24조치’(2010) 이후 실질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은 중단되었고, 북한도 이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두 국가론’ 구조에 맞는 접근방식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45) 변진홍, “민족복음화의 십자로”, 『사목』 136, 1990, 21-22.

예를 들면 한국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별도로 이미 2000년 3월에 개최된 주교회의에서 군중 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가 북한의 행정구역별 단위, 즉 9개 도 및 특별시·직할시 등을 연결하는 자매 결연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⁴⁶⁾ 이는 남북 교류협력 전개와 함께 평화공존 시대가 궤도에 진입하면, 대북 거버넌스 패턴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주도하는 행태를 넘어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교회의 대북협력과 북한 복음화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초인 2013년 3월에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정하고, 두 달 후인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는데, 2024년 1월에 다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에 시작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착공한 20개 시·군에 경공업 공장을 2025년 연초에 완공하였고, 이어 2025년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공장 건설 외에 보건시설, 양곡관리시설, 양식장 및 온실 건설로 확장되고 있다.”⁴⁷⁾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긴 호흡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 과정에 투영될 수 있는 대북협력과 북한 복음화를 연결해 나갈 그랜드 디자인을 앞으로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복음화에 맞물린 교계제도 차원의 한시적 조치 검토 필요성이다. 재북교회의 교구장 서리 체제는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에 기인한 한시적 조치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시기에는 이를 지렛대로 삼는 사목적 배려와 접근 모색이 가능했고, 또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넘어서는 한반도 ‘두 국가론’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를 규정짓는 외교적 관계 설정 패턴을 기본 틀로 삼게 될 것이다.

사실 재북교회의 교구장 서리 체제는 지역교회 설립에 있어 보조적인 기능 시스템이다. 만약 바티칸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이를 수용하고 반겨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재북교회 교구장 서리 체제의 관계 변화 가능성, 즉 재북교회 교구장 서리 체제의 한시성과 시의성에 대한 자체 진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재북교회 교구장 서리 체제가 드러낸 어려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⁴⁸⁾

물론 재북교회 교구장 서리 체제는 한국교회의 민족 복음화 노력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재북교회 교구장 서리 체제하의 한국교회가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추구했던 평양 장충성당 상주 사제

46) 자매결연(안)의 교구별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교구(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평안남도), 의정부교구(개성, 평안북도), 인천교구(황해남도), 수원교구(황해북도), 춘천교구·원주교구(강원도),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양강도), 광주대교구·전주교구·제주교구(자강도), 대구대교구·안동교구(함경남도), 부산교구·마산교구(함경북도) 등이다.

47) 한기범,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이슈브리프』 APR 10, 아산정책연구원, 2025. 1.

48) ‘교구장 서리’ 체제의 한국교회의 대북 접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북한이 한국교회에 직접 제안했지만, 한국교회의 외면으로 무산된 대표적인 경우로 ①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위원장이 서울대교구 민화위를 통해 주교회의 의장 경진석 대주교에게 가톨릭대학교와 북한 교수의 교류를 제안: 이에 대해 주교회의 의장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해 무산됨(한국천주교주교회, 『회보』 106, 1998.11), ② 조선가톨릭교협회 장재언 위원장, 2008년 6월 제49차 퀘벡세계성체대회 참가 지원 요청: 북측이 주교회에 공식 서신을 보내 주교회의가 서울대교구로 이관했으나 서울대교구가 이에 응답하지 않아 무산됨(변진홍, “분단 시기의 북한 천주교회- 그 존재 양식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중심으로”, 『기쁨과 희망』, 175) 등의 경우가 있다. 이때 ‘가톨릭대학교와 북한 교수의 교류’ 제안은 주교회의 차원에서 매듭지어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제49차 퀘벡세계성체대회 참가 지원 요청’의 경우에는 서울교구에서 대답이 없자 장재언 위원장이 바티칸에 직접 이를 호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문제 해결은 동아시아 선교지침인 「Maximum illud」의 가장 핵심 요소인 ‘현지의 지역교회 설립’에 직결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현지 지역교회 설립’이란 대명제는 사실상 재북교회 교구장 서리 체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이 문제는 교황청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교구장 서리’ 체제의 차원을 넘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긴 호흡으로, 즉 바티칸과 북한의 관계 개선 필요성도 포함해 진단하는 깊은 성찰과 이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반도 ‘두 국가론’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미·북일 관계 개선이 급선무다. 이미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일 주교회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에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한국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와 미국주교회의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반도 평화포럼’은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포럼에 참가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주교단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지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함께 봉헌한 뒤,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워싱턴대교구장)을 예방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북한 주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교단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는 전쟁과 폭력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신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 한미 가톨릭교회가 함께 하겠다”⁴⁹⁾는 뜻을 밝혔다. 한국교회는 이런 형태의 보편교회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효과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2022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가한 당시 미국 군종교구장 티모시 브롤리오 대주교와 오클라호마 시 대주교인 그태프 코클리 대주교는 포럼 한 달만인 11월 15일에 각각 미국주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되었다. 특히 현재 미국주교회의 의장인 티모시 브롤리오 대주교는 한반도 평화와 관계가 깊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2018년초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했던 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기현 주교의 호소 메시지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며”(2018.1.19.)를 첨부한 공식 서한(2018.2.26.)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맥 매스터에게 보내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대결보다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이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한 브롤리오 대주교는 김희중 대주교와 이기현 주교 등을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의 방문 목적과 소감을 담은 서한⁵⁰⁾을 미국 전체 주교들에게 보내고,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 영국, 독일, EU를 포함한 14개국 주교회의에도 보내는 등 깊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 역시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49) 이번 포럼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소속 주교들로 위원장 이기현 주교(의정부교구장)를 비롯하여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김주영 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주교단으로는 데이비드 말로이 주교(미국 주교회의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와 티모시 브롤리오 대주교(미국 군종교구장) 등을 비롯한 8명의 주교가 참석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보도자료 “한미 주교회의 공동 주최 ‘2022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성료, 2022.10.07.

50) 이 서신에서 브롤리오 대주교는 한국 주교들과 만나 소통한 내용 즉, ①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대북 제재의 문제점, ② 이산가족문제의 심각성, ③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④ 한반도 위기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제적 지원 필요성, 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 격려와 동참 요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향민에 대한 우리 교회의 관심과 배려에 더욱 큰 힘을 쏟아야 한다. 서울 민화위 차원에서 북향민 가족을 돌보기 시작한 1998년 당시에는 약 1천 명의 북향민이 있었지만, 그 후 매년 1천 명, 2천 명, 3천 명까지 늘어나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금년 3월까지 입국한 숫자는 82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정착하고 있는 북향민 숫자도 34,352명(2015.3 잠정 집계)⁵¹⁾에 달한다.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어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51)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5.6.10.)

〈참고문헌〉

- 강인철, “정치적 대립과 종교적 통합의 동학(動學): 군사정부 시기의 교회와 국가”, 『신학전망』 171, 광주가톨릭대학교, 2010, 143.
- 김갑식,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근본적 방향전환의 함의”, CO 24-04, 통일연구원, 2014.1.9., 1-2.
- 김선필, ‘광복 이후 남북 분단 과정과 한국교회’, 『해방정국, 분단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2018, 40.
- 김진하 외,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24-01, 통일연구원, 2024, 17.
- 박순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사회과학연구』 25(1),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46.
- 변진홍, “분단 시기의 북한 천주교회- 그 존재 양식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중심으로”, 『기쁨과 희망』 24(겨울), 기쁨과희망 사목연구소, 2019, 144.
- 변학문, “1991년 체제의 종말, 평화 주권 실현에 집중할 때”,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자료집, 1-10.
-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권, 분도출판사, 1979, 363.
-----, 『한국천주교회사』 중권, 분도출판사, 1980, 10.
- 심상태, “한국교회 영성의 현주소와 전망”, 『사목』 27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22-23.
- 정대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 방안”,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자료집, East Asia Peace Forum 2025, 2025.4.11-12, 11-31.
- 정육식, “리셋 남북관계: 탈북한의 상상력과 이기이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 자료집, 40-54.
- 제44차 세계성체대회 문화분과위원회 편,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 일선기획, 1990, 12-13.
- 조현범, ‘세계 교회의 흐름과 교계제도의 설정-동아시아 선교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0,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8-9.
- 차남희, “정약용에 의한 천(天) 개념의 변화와 18세기 주자학적 질서의 비판”, 『담론 201』 9(1),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7-8.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 천주교인 통일의식, 무엇이 변했고 어디로 갈 것인가?”, 『201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 2016.6.10.
-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 편, 『북한선교와 통일문제』 통일사목연구논총 제3집, 도서출판 사람과사람, 1993, 12.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복음의 기쁨』, 2014, 93-97항.
- 한윤식, “20세기 초반 교황청의 주요 선교지침- 베네딕토 15세의 교황 서한「Maximum illud」과 비오 11세의 선교회칙「Rerum Ecclesiae」, 서한「Ab ipsis」를 중심으로-”, 『신앙과 삶』 28, 부산가톨릭대 출판부, 2013, 18-19.
- 황경훈,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운동의 영성: 그 가능성의 탐색과 제안”, 『누리와 말씀』 37, 인천가톨릭대학교, 2015, 187.
- 한국천주교주교회, 『회보』 106, 1998.1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보도자료 “한미 주교회의 공동 주최 ‘2022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 성료, 2022.10.07.
-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s://kr.usembassy.gov/ko/john-f-kennedy-american-university-address-1963-ko/> (검색일: 2025.5.20.)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dialogue.unikorea.go.kr/ukd/c/ca/usrtalkmanage/View.do> (검색일 2025. 5. 20)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5.6.10.)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3_0060 (검색일 2025.6.1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450&sitePage=> (검색일 2025.6.10.)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의 교회사적 의미’에 관한 토론문

김선필 베드로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우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이하 서울 민화위)가 걸어온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잘 정리해주신 조한건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무게만큼이나 서울 민화위가 걸어온 여정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평이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글을 전개해주셔서 서울 민화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발표를 나눠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북한 정권을 오랜 시간 적대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를 강하게 단죄해왔던 보편 교회의 영향과 더불어,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1980년대 이후 대북 인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방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교회의는 ‘북한선교부’(1983), ‘북한선교위원회’(1985)를 설립하면서 북한을 악마로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새로이 바라보게 됩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는 북한 지역 신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회 구성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했습니다. 기존의 반공주의적 대북 인식이 교회 안에 여전히 공고했고, 신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세 팽창은 성당 신축, 사제 양성 등 교회의 관심을 내부로 집중시켜 휴전선 넘어 북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교구는 한국 교회 최초로 교구 산하에 ‘민족화해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1995).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 행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바와 같이, 서울 민화위는 기도와 나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교회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북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 교회도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 민화위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주교회의는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1997), 기존 ‘북한선교위원회’의 명칭을 ‘민족화해위원회’(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1999), 각 교구는 산하에 민화위를 설치하고 담당 사

제를 임명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한국 교회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민화위의 등장과 구체적 실천은, 앞서 신부님께서 평가 하셨듯, 북한을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화해의 동반자로 여기는, 곧 대북 인식에 대한 한국 교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의견을 조금 더 보태자면, 서울 민화위의 설립과 활동은 교회의 대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넘어,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민족화해 운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서울 민화위는 민족화해 운동의 선행선으로서 교회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민화위는 냉전 체제가 만들어 놓은 북한에 대한 적대와 불신의 거대한 빙벽을 '민족화해'라는 이름으로 뚫고 지나감으로써, 다른 교회 구성원들도 민족화해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 민화위는 한국 교회 민족화해 운동의 마중물이자 선행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점에서 서울 민화위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지금의 목소리들은 단순한 말의 상찬이 아니라, 서울 민화위가 얼어붙은 현 남북 관계를 녹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교회 구성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이처럼 서울 민화위는 한국 교회 전반에 민족화해 담론을 확산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그리고 일상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 최근 들어 서울 민화위는 평화나눔연구소를 설립하고(2015), 평화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평화 관련 책자들을 발간하고, '화해평화학교'를 개설하는 등 주님께서 알려주신 '평화'가 한반도와 이 세상에 온전히 깃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한민족'이라는 혈연주의에 머물 수 있었던 한국 교회의 시선을 세상의 평화라는 보다 보편적인 시선으로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지난 날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다르지 않고, 그 상흔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갈망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그곳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그곳의 평화가 곧 한반도의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민족화해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일상의 평화를 바라보며 노력하는 서울 민화위의 모습은 교회사적으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역할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서울 민화위는 한국 교회 안에서 민족화해와 평화 운동의 마중물이자 선행선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여러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온 서울 민화위의 여정을 돌아보면, 앞으로 서울 민화위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게 될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지 매우 기대됩니다. 곧, 미래에 맞이하게 될 설립 50주년, 100주년에 사람들은 서울 민화위의 교회사적 의의를 어떻게 평가할지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다가올 50주년과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날 서울 민화위가 지속적으로 혹은 새롭게 힘써 나가야 할 비전과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이 부족하여 이에 대해 선불리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서울 민화위가 보다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지난 30년 간 이뤄진 서울 민화위의 노력은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 간 별다른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현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유화 정책을 공언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서울 민화위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부의 성향에 온전히 내맡겨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교류 사업은 과연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박태균 선생님과 변진홍 선생님의 발표에 충분히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부님의 고견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학술회의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올리며 이상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문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남북관계 30년의 역사는 짧았던 희망의 순간과 속절없던 좌절의 시간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순간들로 점철되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의 감격이 가져다주었던 희망은 10년을 이어가지 못했고, 전세계의 시선을 한반도에 집중시킨 북미정상회담으로 잉태되었던 싱가포르발(發) 희망의 유효기한은 찰나에 불과했다. 지난 30년의 남북관계사, 해방 이후 80년의 분단사를 놓고 보면 희망의 찰나성은 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023년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통일’과 ‘민족’을 내다버린 채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章)이 아니라 별도의 권(卷)을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남북관계 30년의 굴곡에 영향을 미쳐온 주요 변수들이 앞으로 30년 간 남북관계의 날줄과 씨줄을 구성하리라는 보장도 없게 되었다. 국제질서의 요동은 ‘보습과 쟁기를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드는’ 상황을 예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염원하고 지향해온 가톨릭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신앙인의 과제는 더욱 엄중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 가톨릭 교회가 남북관계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 요인과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 요인에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남북관계의 지형을 구성하는 핵심적 행위자는 북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지향 특수관계’라는 기존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하겠다고 선언한지 1년반이 지났다. 북한은 지난 18개월 동안 통일 및 민족 개념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속해왔으나,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 서해 국경선 공포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 완성 여부는 불분명했고 각종 대남 성명과 메시지 또한 불규칙적이고 비체계적이었다.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가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전부터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외전략의 확대를 모색하면서 대남전략을 대외전략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적대적 대남전략을 대외환경의 주도권 확보와 국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대적 두 국가’ 논리가 대남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공간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

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입각해 본다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과거와 같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가 유의미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과거의 관성에 입각한 조치보다는 신냉전 국제질서 편승전략으로 자신감을 확보한 북한의 의도를 꿰뚫는 제3의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남북관계 복원의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도 남아있다. 2026년 9차 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2025년 하반기 북한의 최대 과제는 8차 당대회에서 내놓았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완성이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도 북한의 정치적 일정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와 러우전쟁 장기화와 중동전쟁의 발발 가능성 속에서도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하반기를 대북전략 공조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러우전쟁 조기 종전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의 외교적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도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군사적 협력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 한미 양국의 대북 억제 능력을 위협하는 핵심 군사기술 이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도 북러 양국의 밀월은 더욱 가시화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 관세전쟁을 필두로 하는 대미관계의 악화 국면 속에서 북러관계의 급진전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카드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치적 분야로부터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중국 측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자연스런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물밑대화를 제의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중단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미 양국으로부터의 긍정적 시그널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2018년보다 더 큰 자신감에 차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북한을 외교 무대로 다시 끌어들이는 동력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신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달려있다. 2026년 한반도 지정학의 시계가 빨라지는 만큼 남북관계의 전환 국면에 대비하는 가톨릭 교회의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토론문

서정배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본 발표문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이라는 역사적 여정을 잘 정리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향후 교회의 과제를 정리하고 제시한 훌륭한 발표문이라고 평가한다.

1. 특히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천주교회의 민족화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성원의 의식과 실천 간에 괴리가 심각함을 지적한 점에 주목할만 하다. 그 원인으로 ‘화해 영성의 결핍과 빈곤’을 지적하고, 이를 야기한 ‘불신과 편견’을 걷어내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여 그 길을 주님께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2.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국교회 정체성의 토대였던 ‘순교 영성’이 교회의 세속화 현상에 매몰되었고, 1970-1980년대 민주화와 함께 분출되었던 ‘사회적 영성’마저 퇴조하였다는 지적은 뼈아픈 반성을 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21세기 민족화해의 길에서 ‘화해 영성’의 빈곤과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3. 더 나아가 필자는 ‘평화 영성’이 ‘민족화해 영성’의 지표이자 목표가 될 수 있음과,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같은 평화사상과 통치철학이 인류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예시하였다. 동 사례에 대한 평가에는 다소의 논리적 비약은 있을 수 있으나, 평화 영성과 평화사상에 입각한 갈등해결의 모색이 한반도 평화 조성에도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4. 추가하여 발표문에서 제기한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북한이 당장 이 전략노선을 수정하고 전면적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 여러 분야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상응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이 상응한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사례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비관적 전망을 할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 북한도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언제까지나 무시하고 대남 단절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사안들부터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보적 협력에는 호응해 나올 가능성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창의적 해법과 관련,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변화시키고, 4대국 교차승인론과 유엔 동시가입에 따른 사실상 두 국가관계, 통일방안 상의 '남북연합' 개념 등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국가관계의 형성을 대안으로 상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도 일리가 있으나, 남북연합의 성격이 '최종의 통일국가 형태'라든가, 완전한 국가성을 전제로 하는 EU와 같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 통일방안은 특수관계 논리에 기반하였으므로 남북연합의 '국가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 또는 잠정적 단계'의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화해 협력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특수한 공동체(Korean Commonwealth) 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두 국가론이 전제하고 있다"은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두 개의 코리아에 대한 집단적 승인을 한 것이지 남북한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한 행위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1991년 같은 해 남북 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하였다. 동서독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해도 우리는 특수관계라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향후 북한의 두 국가론 고수에 따른 새로운 남북관계 환경 변화와 '민족화해' 용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우 참신하고 시의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 용어를 삭제한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 민족화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분단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다른 민족임을 주장한다고 곧바로 민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즉 북한이 이제부터 남한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남북한의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호 간의 인식들이 변화하고 고착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통일로 마찬가지로 일방의 권력집단이 통일하지 말자고 한다고 해도 통일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통일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올 수도 있다.

또한 ‘민족화해’ 용어를 그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민족복음화’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안과, 그 근거로 민족복음화가 민족화해의 모(母) 개념인 동시에 확장성을 띠고 있다는 인식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교회의 관심이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지난 30여 년의 교회의 노력은 북한선교에서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민족화해라는 주제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의 동력도 줄어들고 민족화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커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의 존재와 관계를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대안을 둘러싸고 당분간 많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족과 통일담론을 다시 성찰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히려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통일 담론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를 더욱 키우면서,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국제적 협력 틀도 적극 활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 나갈 필요와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 한반도에 현실적 두 국가관계 형성 시 북한 교회에 대한 교계제도의 문제를 잘 분석해 주었다. 교황청의 ‘가장 위대한 임무’ 공포로 교회의 선교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나, 북한 체제 하에서 현지 사제 양성을 통한 북한 지역교회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국가관계에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제기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 교회의 교구장 서리체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를 우선순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와 로마 교황청의 우선적 관심은 선교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계제도는 여건이 허용되고 교황청과 국제적 협력이 가능해지는 것과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30년 동안 활동한 것을 기념하면서, 또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개최된 오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모쪼록 한국 천주교회와 서울대교구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실천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대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정 토론

김종수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조한건 신부님, 박태균 교수님, 변진홍 박사님, 세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 두 정부의 여러 시도들과 우리 교회의 노력 그리고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영성적인 차원의 새로운 방향 모색 등에 관하여 좋은 발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한국 전쟁 이후 첫 만남의 성과로 공표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들으며 가슴 벅찼던 일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의 국민은 남북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들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 성명을 발표하던 당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성명에는 남쪽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쪽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며 부주석인 김영주가 서명하였습니다. 김영주는 김성주, 곧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평화 통일 3대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남과 북 사이에 수 백 회의 회담과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7.4 공동성명에서 더 진보한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또 한 번 기대가 현실이 되려나 생각했으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4월 27일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합의로 발표된 판문점 선언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또다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문점 선언은 2019년 2월 북미정상의 하노이 회담이 “노 딜”(No deal)로 끝나 완전히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의 선언으로 남과 북은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972년의 7.4 공동성명에는 감추어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있었지만, 2000년부터 이어진 세 번의 남과 북의 정상 합의로 이루어진 선언들은 진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되돌릴 수 없는, 무를 수 없는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거듭된 선언들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은 그 원인을 북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 남쪽에 더 큰 탓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서로의 신뢰 부족에서 가장 큰 탓을 찾아야겠지만 우리 남쪽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또한 그에 못지 않은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는 중단되는 운명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진정한

남북 관계의 구축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입건, 기소,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안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북의 김정은과 함께 “윗선”에서 “큰일”을 이루려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협력하며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또 다양한 부문에서 관계를 성숙시켜 오던 종교, 시민 단체도 정부의 큰 성과를 기다리다 정부와 함께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대비를 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성 에디지오 공동체(Comunità di Sant’Edigio)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길을 찾아 해 오던 지원을 계속하고 북한의 복음화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남북한 정부의 관계가 단절된 오늘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국제적 인도지원 단체 등과 함께 그 길을 찾는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원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만을 비는 태도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오랜 단절은 더 오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조한건 신부님의 발제에서도 들었듯이, “상처에 의해 타격을 받지 않은 새 세대”(Johan Galtung, 1930-2024)가 과업을 이어받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받은 세대가 아직 젊습니다.

저는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원죄를 안고 산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 만남도, 아무 관계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을 미워하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원죄와도 같이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새겨집니다. 저는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고자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인내하며 북한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도 다독거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방안 지정 토론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와 실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뜻깊은 학술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최측으로부터 가톨릭교회 밖의 시선에서 토론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요청받은 토론 주제는 “①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문제를 둘러싼 갈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과 “②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사회적 연대 방안”입니다. 종교계 특히 가톨릭교회가 한국 사회 내부와 남북관계 등의 여러 층위의 갈등 극복과 화해, 평화적 공존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자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고민은 최근 몇 년간 민간 남북협력단체들이 처한 어려움에 맥을 같이하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2010년의 5·24 조치와 같은 대북 지원·협력사업의 퇴행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18~2019년, 남·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와 좌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고, 한국사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지만, 하노이 노딜로 대표되는 관계 개선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대북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져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 실행은 물론이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조차 어렵게 된 면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그동안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서의 남북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를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들에게 준 충격이 컸습니다. 통일·민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면에서 민족 중심적 사고보다는 방법과 결과로서 평화를 중심에 두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적대적인 대북 인식도 여전히 강고하고, 여기에 극도의 경쟁과 능력주의, 혐오가 더해지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무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쉽게 분석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없는데, 이 모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실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와 같이, ‘민족화해위원회’ 설립의 의미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민족 화해위원회는 그 이름과 설립 취지가 교회의 성찰로부터 시작하여, 화해의 상대에 대한 배려가 담긴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민족을 위해 추구할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꾸준히 실천해왔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복 50년, 분단 50년 기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계획안>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의미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민족화해기원 미사, 성서 운동과의 연계, 민족화해학교 등은 더욱 더 널리 알려지고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화위에서 진행하는 일반인 대상, 청년 대상, 신학생 대상의 DMZ 접경지역 순례와 평화 감수성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역시 순례 프로그램 확대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평화 감수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사회와 더욱 밀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분단 문제에 대한 교회 내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 대한 교회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민간 남북교류협력단체들도 구조적인 문제들에 봉착해 있으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모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DMZ 생명평화순례’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지속하는 한편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다양한 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7천만 겨레의 하나됨을 뜻하는 민족통일은 평화의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 평화가 있는 곳에 비로소 민족적 화해와 일치가 가능하며,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서로의 삶을 하나로 묶는 통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을 약속했던 남북합의서를 성실하게 실천하여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피에 젖은 이 155마일 휴전선을 평화의 고리로 삼아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중략)

이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협에 항거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끝까지 맞서며, 모든 폭력과 극단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분열과 증오를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기어이 통일조국의 위업을 이룩하는 영광된 새 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을 힘찬 믿음으로 엄숙히 선언 (후략)¹⁾

- DMZ 을지전망대의 <평화통일 기원문>에서

현재로서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어렵지만, 국제적인 틀을 통해 북한과의 소통 및 교회의 직접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다루는 포

1) 개인교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불교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원불교 조경근 교정원장, 유교 최근덕 성균관장, 천도교 김광욱 교령, 천주교 정명조 군중교구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몽은 회장. 1998

럼에 참가하고 있으며,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2021)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톨릭신자가 800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즉위했을 때 장재언 '조선카톨릭교회협' 중앙위원장이 축전을 보내 교황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2027년 8월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북한 청년 초대와 레오 14세 교황의 남북한 방문에 대한 기대 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²⁾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남북한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상당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나아가 체감되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가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정부, 교황청 등과 더욱 다양하고 긴밀한 소통·연대를 통해 다방면에서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 <레오 14세 교황, 서울 WYD 참석...북한 청년들 만남 기대도> 가톨릭평화신문 2025. 5. 24.(<https://news.cpbk.co.kr/article/1164289>)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여정과 사명

발행일: 2025년 6월 22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09호

전화: 02-753-0815

팩스: 02-754-0067

이메일: caminjok@naver.com

홈페이지: www.caminjok.or.kr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

후원: 유니타스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 있습니다.